
권두 인터뷰

민현식 겨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특집

정전협정 · 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미래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민주화해

124 vol
2023.9+10



민족화해

민족화해 2023년 09+10월호(격월간, 통권 124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3년 9월 8일 발행인 손명원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이승현 이예정 임상범 전영선 정구연 조남훈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8,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지원프린스 02-2272-5562

*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Contents

02

편집인 칼럼 | 원희복

동서로 놓지 않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04

포토에세이 | 조천현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06

민화협 비전 선언 | 박병규

민화협 25년, 새로운 비전

08

권두 인터뷰 | 편집부

민현식 거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14

특집 -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미래는

1.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와 과제 | 마상윤
2. 정전협정 70년, 이제는
'기이한 전투'를 끝내야 한다 | 강영식
3. 한·미·일 안보협력, 어떤 미래 가져올까 | 성기영

26

청년 리포트 | 김선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필요할 때"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태우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32

우리의 역사

- ① 3·1운동 민족대표 김병조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 김병기
- ② 2023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 기행 "청년 후손,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르다" | 윤혜린

36

이슈엔포커스 | 이승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日정부 사회·반성없이 미래는 없다

40

청년 칼럼

- ① 어느 청년의 번아웃 경험기:
좌절 이후 우리는 무얼 하고 있나? | 박혜정
- ②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의 이야기 | 채승재

44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 편집부

사할린 2세 사진기자 이예식

48

민족화해 네트워크

- ① 2023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기행
"청년 후손,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르다" | 김민아
- ② 민화협 제13기 집행위원회 출범

50

새로운 시선⑩ | 김진욱

'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

54

문화모니터

영화 속 북한 이야기 28 | 전영선
문학 속 통일미래 39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48 | 이상현

64

회원단체 소식

66

평화를 만나는 기행⑩ | 이영동

경기도 연천 평화기행 첫 번째 이야기

70

궁금한 책

72

민화협 사서함

124 vol
2023.9+10



Cover Story

올해는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이자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역설
했다. <민족화해> 124호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미
동맹 발전 방향과 시민사회가 진행한 독립운동 기념행
사 등을 다뤘다.

동서로 늪지 않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위원·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9월 민족화해협력범민족협의회(민화협) 창립 25년을 맞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화협은 1998년 9월 3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우리는 개인보다 민족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통일운동 협의체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민간이 할 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여럿이 모인 단체는 더욱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단국가 재통일 과정을 보면 오히려 민간이, 단체가 더 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못지않게 남남갈등이 엄존하는 통일문제는 민간단체가 더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와 민간의 협치인 거버넌스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민화협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나, 혹 어려울 때나 남북화해 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민화협 기관지 제호가 <민족화해>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족화해를 위해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습니다. 민족화해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가장 인도적 행위임을 누구보다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통일은 남북 모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민족전체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대의에 공감했기에 보수정치세력과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모인 우리 민화협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갈망했습니다. 민화협은 정파적 이익보다 훨씬 큰 민족적 이익을 먼저 생

각했습니다. 민족의 이익이라는 ‘평형수’가 우리 ‘민족호’를 잦은 정치적 파고에서도 안정적 항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25년은 분명 우리의 기쁨입니다. 25년은 흔히 하는 말로 100년의 4분의 1인 사반세기입니다. 보통 25년이면 우뚝 선 건장한 청년을 연상시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화협의 25년간 민간통일운동 기록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정부도 우리 민화협의 그간 노력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화협, 아니 통일운동 단체들은 과거에 겪지 못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기가 북의 비협조로 인한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시련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남측 내부에서 비롯된 위기입니다. 먼저 민화협부터 잘못을 복기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미 민화협 내부에 다양한 테스트 포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화협은 지혜를 모아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개선할 것입니다. 민화협은 각계각층에 포진한 매우 큰 우호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민족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이라는 우리의 대의에 공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민화협은 지금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민화협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중 통일부 조직의 대거 축소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통일부의 핵심 업무인 대화와 교류협력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우려스런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조직도 복원한다지만, 한 사람의 통일전



문을 키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 조직을 그리 쉽게 없앴다 다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보수정부에서조차 통일부는 부총리급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무엇보다 평화통일의 최일선에 있는 일꾼들의 사기가 이리 떨어져선 곤란합니다.

우리 민화협 회원단체에게도 호소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겪었지만 남북 증오와 대결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공영방송까지 온통 남북 증오와 대결 장면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통일일꾼들... 매도되고 심지어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또 가야 합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 언제 비단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 민화협 회원단체는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씨앗은 추운 겨울을 지나며 더욱 단단해 지는

법입니다.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차디찬 겨울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인식은 대단히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또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소박합니다.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 70년 넘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심정이고, 잠깐 다녀오겠다는 남편을 70년 넘게 기다린 아내의 마음입니다. 업어 키우던 코 흘리게 동생이 살아 있는지 궁금한 누님의 그리움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인내하며 내실을 키울 것입니다. 지킬 마음가짐 하나만 당부합니다. 나의 행동이 남북화해와 소통에 방해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동서로 누우면 혹시 꿈에서라도 남북 소통에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나의 작은 습관과 행동이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에 방해될까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실제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 마음가짐입니다.

민화협 창립 25주년의 기쁨과 다짐을 남북과 통일부, 회원단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35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조천현 PD



문이 열리면 —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일은 내일은 하며 기다리며
문 앞에 서성인 날이 얼마였던가요.

문은 길입니다
문이 열리고
가슴이 열릴 날은 언제쯤일까요.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민화협 25년, 새로운 비전

박병규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

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 중도를 망라하여 민족화해와 통일 준비를 위해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로 만들어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올해 25살이 되었다. 사람으로 치면 한창 혈기 왕성하게 일할 젊은 나이이다. 그러나 지금 민화협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활기차게 일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는 막혀있고, 관련 부처인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은 4개가 폐지되거나 축소됐으며, 국제정세는 미중갈등을 비롯해 신냉전 시대가 온 것처럼 엄혹하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려 만든 대표적인 민간단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화협의 주인인 180여 회원단체들의 우려도 크다. 게다가 최근에는 민화협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언론보도도 있었다.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보도는 국민들에게 민화협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게 마련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마침 새로운 대표가 취임했다.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CEO 출신이다. 이것은 민화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다. 물론 손명원 대표는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손자로서 민족과 통일이라는 민화협의 키워드와 지향하는 가치에 걸맞은 분이다.

민화협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CEO 출신의 대표가 적임자일 것이다.

손명원 대표는 말했다. “기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조직이다. 물론 그것을 시민단체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민화협도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어려움에 봉착한 민화협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민화협 활동과 사업방향을 재정립할 ‘비전 선언문’ 작성 작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물론 정관에는 민화협의 목적이 명시돼있다. 정관 제2조(목적)에는 “본회는 남북의 평화통일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반 마련을 위해 남남, 남북 및 해외동포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 강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손명원 대표는 이러한 정관상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되, 더 선명하게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비전 선언문에 담기를 원했다. 비전이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고(consequential), 도전적이어야 하며(challenging), 명확해야 한다(transparent)는 경영이론에 따른 것이다. 더군다나 그 비전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compelling)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화협 사무처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작업을 가졌다. 1차 회의에서는 비전 선언문 작성 추진에 관한 배경 설명과 간략한 아이디어 교환이 이뤄졌다. 2차 회의 이후

부터는 손명원 대표상임의장도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비전 선언문 내용이 취합되었고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3차 회의에서는 초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비전 선언문이 탄생했다. 비전 선언문은 “함께 만드는 평화, 모두가 만드는 통일: 국민소통과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민화협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서문을 비롯해 다섯 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비전 선언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민화협은 주로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해온 단체였지만, 이제부터는 경제협력 사업도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손 대표는 남북이 비즈니스를 매개로 한 파트너십을 가질 때 더 자연스럽게 오래갈 수 있는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본인의 경험을 살려 경제적으로, 기술협력 차원에서 민족화해, 아니 그것을 넘어 민족화합에 접근해 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이 파트너가 되어 세계 각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함께 으뜸가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족으로 우뚝 서보자는 비전은 분명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밖에도 기후위기와 자연재난, 감염병 등 초국경 신종안보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이번 비전 선언문의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 비전 선언문은 집행위원회와 의장단 회의에 보고되고 추진되었다. 이제 회원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비전을 실현할 전략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해외동포들의 지혜도 필요하다. 민화협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화협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을 성취해낼 때까지 모든 분들의 관심과 열정과 협조가 절실한 때다. 🌐

“함께 만드는 평화, 모두가 만드는 통일”
- 국민소통과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민화협의 다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 간 화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정치적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남북한 당국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문화·종교·학술·청년·스포츠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민족 동질성과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자연재난·감염병 등 초국경 신종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대화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고,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현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은 문화적 통일을 위한 준비

“물이 막히면 큰물(홍수)이 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듯, 말길이 막히면 사람의 사이가 막혀, 되는 일이 없다. 말길이 막힘없이 흐르면 일이 풀리고 겨레의 삶도 풀리고 기쁨의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의 물길, 바닷길, 하늘길을 열고 말길도 열어야 한다.”

올 9월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 민현식 이사장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 긴장 국면 속에서도 ‘말길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겨레말큰사전》이 남북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모두 아우르는 8,200만 ‘겨레의 사전’이 되기를 소망한다. 8월 21일 민현식 이사장을 만나 《겨레말큰사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보았다.

대담 전영선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 북한연구학회 회장 | 정리 편집부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2022년 9월 사업회 제7기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어느새 1년을 맞이하였다.

A 지난 18년 동안 사업회를 이끌어온 선임 임원과 현 임직원들의 노고로 사업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덕분에 빠르게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치·경제적 통일에 앞서 ‘문화적 통일’부터 이루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비록 현재는 남북 간 교류가 잠시 멈춘 상황이지만, 인내로 기다리면 다시 남북이 재회하고 《겨레말큰사전》 공동집필을 재개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모든 임직원이 총체적 사전 편찬 역량을 높이고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국민의 여망(興望)을 모아 국민과 함께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이 되기 위해 힘쓰고자 한다. 사업회 편찬원들은 스물다섯 차례에 걸쳐 남북이 만나 한 주일 안팎으로 합숙하며 공동집필을 한 경험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학술적·문화적 통합을 경험했다. 다시 남북이 만난다면 편찬사업의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타민족의 외국어사전이 아닌 우리의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Q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지만 임기 중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A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25회 만났다. 남북공동편찬회의(이하 공동회의)를 통해 30만 7천 개의 올림말(표제어)을 선정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업회는 언제라도 공동회의가 재개되면 《겨레말큰사전》 완간을 빠르게 협의할 수 있도록 북측과의 협의자료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1질 10권 분량으로 만들어 놓았다. 장차 남북 합의가 된 후 종이사전을 발간하면 가제본과 같은 규모로 나올 것이다. 한편 오늘날 사전산업 분야가 종이사전 발간의 한계가 있어 전자사전(웹사전과 앱사전)으로 전환하였듯 사업회는 국민의 남북 언어 이질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 언어통합을 향한 국민적 공감



지난 해 11월 3일~4일 열린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민현식 이사장.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제공)

대를 높이기 위해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개발해 공개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 2028년 4월 26일까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유효한 사업 기간이다. 2027년 10월까지 법정 기한 내에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한국의 사전은 민간출판사가 중심이 되어 사전산업을 이끌어왔으나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이 설립되면서 첫 사업으로 국어대사전 편찬을 내세웠고 때마침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사전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 민간출판사들이 사전 편찬사업을 감당할 능력을 잃었다. 현재는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국가 관리 사전의 두 축으로 삼고 사전의 관리에 집중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국내의 공직유판단체로서 국어사전 편찬조직은 사업회가 유일하다. 민간에서는 사전 편찬 관리를 인터넷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이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전도 '네이버'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자원을, '다음'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자원을 토대로 각각 서비스하고 있고 대역어사전, 오픈사전 등의 서비스를 위해 사전 자원을 구축·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업회의 역할과 목표는 이들 사전과도 구별되면서 남북 및 전 세계 한민족과 외국인도 애용할 수 있는 《겨레말큰사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 및 세계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전 만들 것

Q 지난 6월 사업회에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이하 《겨레말작은사전》)을 출간했다.

A 남북 언어 이질화 양상과 북한의 언어 실태를 알림으로써 남북 언어문화 차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남북에서 쓰이는 생활어에서 차이가 많은 사례를 3,053개 모아 《겨레말작은사전》을 발간했다. 남한의 청소년과 일반 국민이 남북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검색이 편리하게 선정,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북한의 일상생활 용어와 교과서 용어, 기초 전문용어, 관용구와 속담 등을 위주로 수록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남북 대조어휘집을 〈부록〉으로 넣고 〈찾아보기〉를 통해 검색하기 쉽게 안내했다. 국민이 북한어를 접하고 무슨 뜻인지 궁금해할 때 그동안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은 근년에 규범 표준어만 수록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어, 방언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그래서 《우리말샘》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북한어 정보가 미약하고 뜻풀이도 “...의 북한어” 수준으로 제시된 실정이라 북한어의 실상을 자세히 접하기 어려웠다. 《겨레말큰사전》이 앞으로 남북 공통의 동질적인 단어를 다수 공통어로 수록하고, 이질적인 북한어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면 남북통일 대비 통



대답을 나누고 있는 민현식 이사장(왼쪽)과 전영선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합사전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지난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 말투 사용에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법의 금지 조항을 보면 남한 말투가 북한 내에 적지 않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A 올 1월 23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9호로 채택 공포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은 남한의 대중언어문화가 북한에 침투하는 것이 심해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제1조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사명)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괴뢰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하여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되었고, 제2조에서는 ‘평양문화어, 괴뢰말, 비규범적 언어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평양문화어’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언어로서 우리나라 국어인 조선어의 기준”,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 ‘비규범적 언어요소’는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와 일본말찌꺼기,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을 비롯하여 평양문화어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제19조를 보면 ‘괴뢰식 부름말을 본따는 행위금지’에서 “공민은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 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과 같이 괴뢰식 부름말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름말을 쓸 수 있으나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제20조는 ‘괴뢰식 어휘 표현을 본따는 행위금지’, 제21조는 ‘괴뢰 서체, 괴뢰 철자법을 사용하는 행위금지’까지 요구하고 있고, 제22조는 ‘괴뢰식 억양을 본따는 행위금지’를 밝히 “공민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억양까지 규제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최대 무기 로동교화형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과도한 규제 위주의 언어정책과 입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위 정책 입법도 한류에 대한 위기의식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한류가 통일의 힘으로 작용해 남북 신세대의 문화의식이 문화적 통일의 물꼬를 틀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Q 앞으로 공동회의의 재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북에 회의 재개를 위해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A 남북 간 비정치적 문화교류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이 있다. 언어문화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민족통일의 유일한 공동문화자산의 핵심이고 원천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어떤 정치·경제적 국내외 정세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적으로 지속해야 할 사업이다. 그동안 25회의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 편찬원들과 어문학자들은 그 어떤 남북교류보다도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해 겨레말의 하나됨을 통해 진지하고도 뜻깊은 언어통합사업을 해왔다. 그 결과 30만 7천 개의 합의된 올림말에서 40%는 뜻풀이까지 합의할 수 있었다. 25회나 만나다 보니 남북교류 역사상 남북 편찬원과 어문학자들만큼 성숙한 소통을 한 경우가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측이 남북 겨레 공멸의 핵 경쟁을 접고 남북 호혜 협력의 길로 나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나 이산가족 상봉, 국제경기 공동참가 등 다양한 남북문화교류사업에 나선다면 남북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의 긴장 완화에도 유익함은 물론 겨레의 번영과 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동안 사업회는 북한에 정기적으로 공동회의 재개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답변이 없어, 기다리면서 60%의 미합의 원고를 사업 재개 시 시간 절약을 위해 가제본 형태로 2021년에 만들어 두었다. 남북 화합의 물꼬를 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꾸준히 우리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여 왔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한다.

평화를 위한 '말길'을 열자

Q 그동안 남북의 민족 동질성 회복이 통일을 위한

목표 중 하나로 중요시되어 왔다. 하지만 일방적인 동질성 추구보다는 상호 이질성을 먼저 인정하고 과거 저항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젊은 세대에게 민족 동질성 회복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A 남북은 체제 이념적으로는 이질성이 극대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 문화상으로는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탈북민들도 남한에 와서 2년 정도면 대체로 적응하고 정착한다. 따라서 남북의 체제와 문화 현실에 나타나는 체제 이념적 이질성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공통문화유산을 통한 동질성을 극대화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독일은 Grimm 형제가 시작한 《독일어사전》 편찬 사업을 1838년 독일 분열기부터 2차 대전 후 동서독 분단기까지 이어가 1961년, 122년 만에 사전을 완성한 바 있다. 중국과 대만도 첫 번째로 1996년 시작해 2003년 《양안현대한어상용사전(兩岸現代漢語常用辭典)》을 발간했고, 두 번째로 새로 6년 작업으로 중국과 대만의 상용한자 1만3천4자를 포함해 10만 단어 규모의 《중화어문대사전(中華語文大辭典)》을 2016년 발간했다. 최근 중국, 대만 간에 양안관계의 긴장이 있다지만 학술교류는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와 대조적이다. 기성세대의 통일관이 관념적, 감성적, 원론적, 당위적 관점에 머문 듯 보이고, 젊은 세대의 통일관은 현실적, 이성적, 각론적, 선택적 관점에 머문 듯 보임은 차라리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실용적, 현실적 통일방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본다. 실향민 세대와 실향민 후손 세대와 남한의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가 냉철하게 통일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의 단일화라는 '민족어 통일' 개념보다도 지역어의 다양성

이 현존하듯 남북 언어의 공존을 통한 '민족어 통합'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 확장된 개방적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간다면 통일의식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탈북민을 미리 온 통일세대로 보고 잘 정착하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되 장차 통일의 주역으로 훈련시켜 각 분야에서 언어통합의 본보기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Q 향후 계획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여전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추진되도록 홍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와 연대하여 2021년부터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해 올해 11월에는 제4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편찬 성과를 바탕으로 <겨레말TV>와 지역 순방 프로그램 ‘전국 겨레말 나들이’, 겨레말 소식지, 동영상 제작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겨레말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언어통합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동아리를 육성하도록 교육 자료를 사업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 문제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자료를 내려 받아 학교와 직장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언어 통계 정보 누리집인 ‘민족어 통계 누리집’ (ethnologue.com) 자료(2021)를 보면 세계 7,000여 개 언어 중 5,000만 명 이상 쓰는 언어가 25개이고, 그 중 한국어는 20위에 이르러 언어 활력(language

vitality)이 매우 높고 유엔에서도 세계 10대 실용 언어에 한국어를 포함할 만큼 한국어 위상이 높아졌다. 미국 현대언어학회가 조사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외국어 수강 실태 조사에서도 한국어가 10위권에 들었다. 전 세계에서 문맹어의 문자 역할을 하는 문자는 400여 문자 중 알파벳, 한자, 아랍글자, 한글 등 20여 개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변의 한자 문명에 동화되지 않은 것도 한민족 고유의 문명을 창출하고 한글 문화로 문맹을 퇴치하며 나라를 지켜온 덕분이니 ‘한강의 기적’은 ‘기적의 한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문맹자가 80~90%에 이르는 상태에서 1920년대 말부터, 해방 후에 문맹퇴치 운동을 지속하고 대한민국 건국 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높은 교육열 덕분에 문맹자가 거의 없는 나라가 됐다.

이제 한국은 30-50클럽(5천만 이상 인구로 3만 달러 소득 달성 국가)에 속하는 7개국이 되어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고, 식을 줄 모르는 K-Pop, 드라마, 영화, 요리, 패션 등 각 분야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가 세계인에게 많이 학습되고 한국어의 위상도 올라 한국어 사전의 용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겨레말큰사전》도 남북 겨레는 물론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물길은 막힘 없이 흘러야 하듯, 말길도 막힘 없이 흘러야 한다. 물이 막히면 큰물(홍수)이 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듯, 말길이 막히면 사람의 사이가 막혀, 되는 일이 없다. 말길이 막힘 없이 흐르면 일이 풀리고 겨레의 삶도 풀리고 기쁨의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의 물길, 바닷길, 하늘길을 열고 말길도 열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되도록 남북통일의 그날까지 남북 및 해외 8,200만 겨레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전협정·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미래는 ①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와 과제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발효는 1년 넘게 지연되어서야 이루어졌지만, 조약 체결을 기준으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사람의 인생에 빗대 보자면 고회를 맞이한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덕분에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경제개발에 힘쓸 수 있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된 동맹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미국은 동맹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를 얻게 되었다. 전후 미국 외교의 가장 성공적인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맹의 탄생

이러한 성공이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에서 시작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시 한국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북한의 남침 배후에 소련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공산주의 무력 팽창에 대한 자유세계 국가의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 이후 전쟁은 소모전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한국에 발이 묶이고 싶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쟁을 종결짓고자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태도를 불안하게 여기면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한편 미국에 동맹 관계 체결을 요구했다. 그는 반공통일이 최선이고, 또는 차선책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목표로 삼았다. 그 외에는 신생국 한국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북진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

하기 위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북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방위조약 서명을 결정했다. 원래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승만의 놀라운 외교 성과였다.

진통과 성숙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갈등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가 두드러졌다. 첫째, 미국의 안보 제공 약속을 한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이 한국을 방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중반 베트남에 우리 병력을 파견했던 일과 1970년대 자주국방을 추진하며 핵무기 개발까지 시도했던 것은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이 중 베트남 파병은 내용상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한미 간의 밀월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각종 경제적 특별대우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 자주국방의 연장선상에서 시도된 핵 개발의 경우에는 미국이 동맹의 파기까지 거론할 정도로 한미 간의 첨예한 긴장을 초래했다.

둘째,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작동 또는 부작동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기 이전,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권위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공산주의와의 국제

적 명분 경쟁에서 지는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한국 민주화의 주된 동력은 될 수 없었으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위한 압력을 부단히 가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인권 증진을 명시적인 외교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는데, 이는 유신 체제하의 박정희 정부와의 잦은 마찰의 한 요인이 되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싹튼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한국의 반미주의 확산의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이 신군부를 암묵적으로 지원하여 군 병력을 동원한 민간인 학살을 방조했다는 의심은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세력이라는 기존의 인식에 반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미국이 자기 영향력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유지하려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1980년대의 청년 운동권은 이후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장기 지속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했다.

셋째, 지역 협력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다. 미국은 한국(1953년) 및 일본(1950년 및 1960년)과 각각의 양자동맹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특히 일본을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일본이 전후 복구를 이룬 뒤에는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기를 촉구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희망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중심에 일본을 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반공주의를 견지하는 한국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보면서 대일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중요한 막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한일 간의 반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미국이 희망한 한·미·일 지역 협력도 달성하기 어려웠다.

한미동맹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이견도 나타났다.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지고 특히 2012년 등장한 시진핑 주석 치하의 중국이 공세적인 대외행동을 이어나가면서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보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점증하는 대중위협인식의 맥락에서 한미동맹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가 민감한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은 2017년 이후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전략조정을 추진하였고, 한미동맹도 강한 조정 압력에 처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통적 임무에 계속 집중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미중 사이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대체로 유지했다. 이 문제로 한미간의 눈에 띄는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도전 과제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평가와 과제

이상의 갈등 요인은 동맹의 성숙기를 거치며 이미 해소되었거나 해소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맹의 신뢰성 문제는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에 따라 다시 제기되었는데,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 협의 그룹(NCG)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민주화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여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반미 여론의 주기적 비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요인이 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반미적 정서는 한국의 여론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 여론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나라로 조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여 작년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포용성을 전략의 원칙 중 하나로 표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봉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삼아 지난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 질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세계정세에서 강한 동맹은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 또는 관리해야 할 과제도 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를 넘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조도 요구되는데,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을 심화하는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도 요청된다.

둘째, 내년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미동맹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현실화한다면 세계정세와 함께 한미관계도 크게 요동칠 것이다. 트럼프 제2기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

마상윤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전협정·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미래는 ②



정전협정 70년, 이제는 ‘기이한 전투’를 끝내야 한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7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지난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었다.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당시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 조인식을 취재한 한 기자는 “거기에는 의식에 따르는 어떠한 극적 요소도 없고 강화(講和)에서 예기할 수 있는 화해의 정신도 엿볼 수 없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전’이지 ‘평화’가 아니라는 설명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 기자의 제목은 ‘기이(奇異)한 전투의 정지’이다. 70년 전의 전쟁은 그 자체가 기이한 것이었으며 정전협정이 조인된 그 날의 모습 또한 기이했다.

정전협정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3개월 내에 당사국들의 정치회의를 통해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즉 정전협정은 처음부터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잠정적 협정이었다. 하지만 1954년 제네바 정치회의가 결렬된 이후 정전협정은 하나의 체제로 굳어지고 말았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은 잠시 멈춰져 있을 뿐이지 여전히 7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전체제가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상태를 구축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남·북·미 정상들은 ‘정전’을 ‘종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와 현 정부가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진보진영의 반발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갈등이 거의 진영 간 이념적 내전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전·현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일관적이다. 현 정부의 강경 위주의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2019년 이후 문재인 정부를 대했던 태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다음날 “남조선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마지막 담화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여정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무력을 국체로 삼기로 결정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한 지향과 관심을 완전히 접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평화체제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든 혹은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든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의제였던 종전과 평화협정, 평화체제는 상당 기간 언급조차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수습하고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0년부터 민화협을 비롯한 국내외 시민·종교단체들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하자는 요구사항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며 서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남북을 비롯한 한

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의 주장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을 통해 힘의 우위를 확보해 북한 비핵화를 강제하려는 방안과는 달리하면서 당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새로이 제시하기에는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1년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남북이 서로 합의한 이후 30여 년 넘게 조심스럽게 지키고 가다듬어온 남북 간의 ‘관계’가 곧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렇듯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도 국민적 지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가 주창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남·북·미가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최우선적인 의제로 삼고 단절된 대화를 복구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가 평화체제를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을 겪은 한반도에서 평화는 시대의 과제이고, 헌법정신이며, 국민 다수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치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도 근본적인 성찰과 창의적인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평화프로세스의 대안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다시 평화, 다시 화해로 나가자

특히 중단된 민간차원의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득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와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민간의 몫이다. 특히 정치·군사적 근본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교류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두 개의 축으로 달성 가능하며 정치·군사적 신뢰축이 그 하나라면 각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현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즉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하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남북 간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내 민간 교류단체들과의 협의 플랫폼인 「남북사회문화 거버넌스」구축을 통해 민간단체들과 민·관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런데 윤 대통령



의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는 지시 이후 통일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전략 방향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지금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민간의 활동과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연계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는 별개로 정권의 교체나 정세의 변화에 상관없이 민간차원의 다양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한 담대한 구상의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 플랫폼을 새롭게 개선·정비할 때이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전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특별히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9년 유엔 총회 연설을 들려주

고 싶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구시대의 격언은 지금 한반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의 기초이론을 제공한 아인슈타인의 충고처럼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고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25여 년 전 시민사회의 민족화해운동이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듯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우리 시민사회의 힘으로 돌파해 낼 수 있도록 지금은 국내 그리고 해외의 모든 평화운동 세력이 힘을 모을 때이다. 화해와 협력만이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이며, 화해와 협력은 압박과 제재보다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전 70년, 이제껏 한반도를 억누르고 있는 70년의 ‘기이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강영식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전협정·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미래는 ③



한·미·일 안보협력, 어떤 미래 가져올까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21세기 들어 국제질서의 대전환은 국제정치학자는 물론 현실 외교의 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주제였다.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들어 한반도가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기조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의 대전환이 이러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안보협력과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재편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국제 및 지역질서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질서는 일반적으로 주권국가들이 공유하는 국제관계의 원칙과 제도 등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원칙과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결성된 자유주의적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근대 국제질서의 핵심은 주권이라는 대내외적 권위를 가진 국가들이 다른 어느 기구나 조직의 권위에도 복속되지 않는다는 국가 간 합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상위체계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합의했다.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출현이었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국가 간 거래의 자유화, 민주주의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평화적 국제질서의 확립, 개별국가의 행동 규범을 설정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 제도의 정착 등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환

2차 대전 이후 구조화되기 시작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해 탄생한 미국 중심의 단극 패권체제는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상대적 쇠퇴 조짐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기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를 예견하는 진단의 중심에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이 논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미중갈등이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국제질서의 전환을 해석하는 것도 단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복수의 요인들이 국제질서의 전환 논의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 금융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점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물결 속에서 급성장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투자와 대출에 적신호가 켜지는 순간 신용경색과 실물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전이되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국제질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부적 도전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 내에서 드러난 자유무역 체제와 동맹에 대한 적대감, 극단적 반(反)이민 정책, 다자주의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설계자인 동시에 최고책임자였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냉전의 소멸 이후 단극체제의 유일 당사국으로서 미국이 제

공해왔던 군사적, 경제적 공공재의 제공을 중단하는 순간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한 이행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자본주의의 실패와 미국 영향력 쇠퇴의 증거로 활용하면서 인류운명 공동체라든가 신형국제관계와 같은 대안적 외교담론들을 내세우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계에 도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도전요인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시진핑 3연임 등 정치적 리스크, 공세적 외교패턴, 중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인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로 인해 국제질서는 세력권 경쟁의 부활과 진영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의 영향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 등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신형안보 요소들로 부상하면서 미국, 또는 중국 등 리더십을 가진 한두 개의 국가가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장에 관한 유엔의 전통적 기능은 도전받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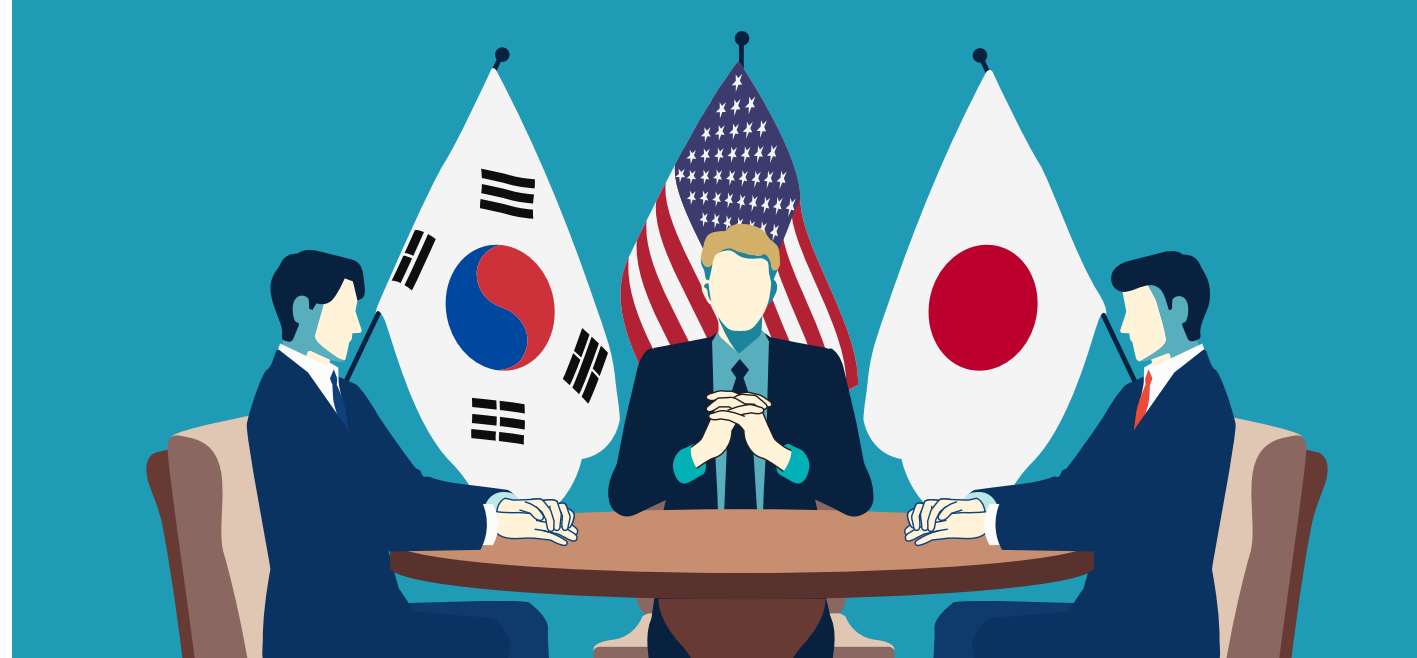
이처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해온 요인이 다양한 만큼 기존 국제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작업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에 놓고 대별한다면 미국 주도 자유주의 패권질서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세력과 질서에 의해 대체될 것인가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자체가 아

닌 리더십의 위기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주요 원리들을 이미 내재화하였으므로 이러한 질서가 지속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을 추구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인의(仁義)보다는 패도(覇道)에 기반한다면 소프트파워를 내세운 미국형 리더십의 상대적 가치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반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로 인해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미국이 전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미국 자신의 안보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유주의 패권질서의 명분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절제된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로 이어질까

최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가 재편 양상을 보이는 것도 미국 중심 자유주의 패권질서의 유지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동시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3 등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지탱해왔던 다자주의 협의체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 북한문제 해결을 고리로 3자 안보협력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포괄적 국제질서의 프레임 속에서 안보, 경제, 기술분야를 포괄하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시도되



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명분과 대북한 영향력을 내세워 한미관계의 이완을 노렸던 중국의 동북아 전략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공고화 구도 속에서는 작동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의 포괄적 안보 공조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물론 각국 정부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결과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 아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기술 및 우주 분야까지 확대하기를 원한다. 이미 오키스(AUKUS) 동맹과 쿼드(Quad) 등 소(小)다자 네트워크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횡적 연계를 도모해 온 미국에게 한·미·일 3각 협력은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다.

일본은 3국 협력 방식을 통해 북핵 억제 능력을 높이는 한편,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의 결정적 계기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은 대북한 확장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발 도발 징후에 대한 탐지-경보-추적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기술·에너지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체로서 한·미·일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한다. 3국

협력의 범위를 글로벌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 3국 모두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국제관계에 의해 대체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위기감과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의 공고화는 한일 간 군사협력 수준과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차출 여부, 중국과 북한의 반발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국내외적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공세적 전장준비'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가장 유효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지속되고 한·미·일 군사협력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긴장감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성기영은 영국 University of Warwick에서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필요할 때”

김선규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30일 서울 조선회관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

2023 한반도 국제포럼이 8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북핵, 북한인권 등 한반도 당면과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주최해 온 국제회의이다.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자 정부에서 최초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해이다. 이를 기념해 “북한, 인권, 통일”을 주제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1세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2세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3세션 “한

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이동선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한반도 통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고, 그 속에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샘솟길 바란다”며 포럼 개막을 알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서면으로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이동선 소장의 대독을 통해 한반도는 더 광범위한 전략적 경쟁구도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전의 위협에까지 놓여있다면,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끊임 없는 협력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

화(complete&varifiable denuclearization)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국경을 개방하여 해외체류 중인 북한주민들의 입국을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유엔과 국제사회 입국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유엔은 (북한에게)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속 제공하여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실현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해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했다. 통일부 장관은 8월 18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통일 비전을 3국 정상이 모두 공감하고 지지했는데, 이는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최초로 한반도 통일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한반도 문제에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다. 북핵, 북한인권, 인도적 현황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미래 비전에 이르기까지 한·미·일의 대북공조가 확대되고 진화되었다고 평했다. 둘째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된 점이다.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자유와 평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제공공재로서의 가치와 정당성을 공인 받은 것이다. 김 장관은 “한국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유·인권·평화가 실현되는 통일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와 지지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북핵문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향후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국제 NGO가 함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릴 것이며,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세션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두고 파격적인 주장과 토론이 있었다. 미국 현실주의 국제정치학파를 대표하는 존 미어사이머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문제가 동북아 지역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틀렸다”며, “북한의 핵 보유가 오히려 광범위한 관점에서 한반도 안정을 가져 온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에 둘러싸인 가장 위험한 지역에 놓여있기에 국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과거 냉전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핵 때문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한반도의 전쟁 발발 확률이 낮아지고, 그러므로 북한의 핵 보유가 비핵화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전쟁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어진 토론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개발과 보유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역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청사오허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가진다면 핵개발과 보유가 난무하게 되어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행사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 ‘KGF Korea Global Forum’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공익을 위한 발자취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부친인 신광렬 선생의 흉상과 함께 한 신민식 위원장.

광복 78주년을 맞아 민화협은 롯데장학재단, 독립기념관과 함께 지난 8월 11일과 12일 ‘2023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 기행’을 진행했다. 20·30대 독립유공자 후손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기행은 천안 지역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후손들 간 친교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도 함께했다.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청파 신광렬 선생의 ‘공홀지심(矜恤之心)’가치와 신홍균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실천하고 있다.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한 사회 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보훈활동을 국가유공자까지 적극 확대하고 있다. 8월 18일 신광렬 선생의 차남이자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인 신민식 잠실자생한방병원장을 만났다.

대담 및 정리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자생의료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생의료재단은 2000년 1월 21일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전국 20여 개 병원을 두고 현대 한의학 차원에서 동양학과 서양의학의 협진으로, 척추 관절 질환을 비수술로 치료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비수술 척추치료를 100만 명 이상 치료한 병원으로 일찍이 인정받기도 했다.

재단은 제 숙조부 신홍균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과 부친이신 청파 신광렬 선생의 ‘공홀지심(불쌍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철학을 실천하고자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한의학 R&D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봉사와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 △비수술 척추 진료 등 표준화, 과학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Q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신홍균 선생과 청파 신광렬 선생에 대해 소개해 달라

“두 분은 투사였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한의사

들은 대부분 군자금 등 후방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 숙조부 신홍균 선생은 독립전쟁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셨다. 독립운동 집안으로 일제에 낙인이 찍힌 저희 집안은 1910년 한일병탄 이후 1911년 중국 장백현으로 망명을 떠났다. 그런데 1919년 가을 일제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저희 집안이 살던 마을을 초토화 시켰는데, 그때 선친의 막내 삼촌께서 일본 토벌대에 의해 압록강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당하셨다. 그 충격과 원한으로 신홍균 선생은 무장투쟁을 결심하셨던 것 같다.

1920년 독립군 대진단을 창설한 신홍균 선생은 대진단장이자 군의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한국독립군에 합류하여 지청천 선생과 함께 1933년 독립군 3대 전투 중 하나인 대전자령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다. 당시 일제를 급습하고자 산속에 매복하며 폭우를 견뎌야 했는데, 신홍균 선생이 한의학 지식으로 매복지 근처 ‘검은 버섯(목이버섯)’을 채취해 전투식량으로 사용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하셨다.

제 부친 신광렬 선생은 자연스레 부친의 삼촌이신 신홍균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17세일 때 막내 삼촌의 살해 장면을 목격했으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 민족학교인 동흥중학에 다니면서 가업으로 익혀온 의술을 바탕으로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했으나,



2022년 12월 27일 자생의료재단에서 '제9회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해당 장학사업은 2014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제가 독립운동 집안이라는 이유로 수험표조차 내주지 않았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쌓이던 중국 내에서 3·1만세 운동 11주년을 기념하고자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시작됐다. 그 여파는 중국 만주와 간도지역까지 확대되었고, 그때 아버님이 적극 참여하다가 일제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옥살이 이후 아버님은 한의사로서 본격적인 구국활동에 나섰다. 서간도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한 후 1932년 광생의원을 개원해 독립군의 군수품과 군자금을 전달하는 등 항일 투쟁을 지원했다. 해방 이후에는 일제에 의해 말살되어가던 한의학을 되살리려고 한의사 시험에도 합격해 청파한의원을 개원하였고, 집안의 흠어진 의술을 집대성한 <청파협방요결>을 저술하며 긍휼지심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셨다.”

의술로 독립투쟁에 나서다

Q | 우리의 독립운동사(史)에서 한의학은 어떠한 존재였나

“한의학은 우리의 민족의학으로써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큰 탄압을 받았다. 한의학을 두고 비과학적이

라며 격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생(醫生)’이라며 서양 의학을 바탕으로 한 의사와 차별을 두고 5년마다 의생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독립운동을 막고자 한 의도도 있다고 본다. 한의사는 직업 특성상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 약초를 구한다는 이유로 칩통을 들고 산속에 은거 중인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했고, 독립운동 거사를 위한 비밀문서를 전하는 연락책의 역할도 했다. 때론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로 위장한 독립운동가들의 비밀기지이자 독립운동 물자와 군자금을 지원하는 후방 기지이기도 했다. 실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비밀연락망인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한약방과 한약국이 자주 사용된 기록도 있다.

최근 한의학계에서는 선배 한의사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하는 학술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8월엔 저희 재단과 인하대학교 대학원 융합고고학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한의사들의 삶’을 주제로 신흥균, 신광렬 선생의 독립운동사와 민족의학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고, 2023년 8월 10일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사의 한국독립운동’을 주제로 대한한의학회와 대한학술원에서 광주항일학생운동과 중국 북간도 항일운동, 그리고 한의사의 의병전쟁 등을 다룬 학술대회를 열었다. 재단에서는 한의사의 독립운동사(史)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꾸준하게 학술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Q | 신광렬 선생과 신흥균 선생의 서훈이 늦어졌다

“신흥균 선생은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고, 신광렬 선생은 2022년 대통령표창에 서훈됐다. 서훈을 챙기지 못한 것에 큰 이유는 없었다. 생전 아버님은 의술활동으로 바쁘게 지내셨고, 후손인 저와 형님은 두 어른의 독립운동 업적과 그 정신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살아가고자 했다. 솔직히 두 어른에 대한 서훈이 마치 병원 홍보같이 느껴져 더 조심스럽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두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후손의 도리이자 책임’이라는 지적에, 그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부친이 남긴 <월남유서>를 바탕으로 두 어른의 독립운동 공적 사료들을 찾아 나섰다.

참 힘들었다.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사용했던 두 어른의 이명(異名)이 문제였다. 신흥균 선생은 ‘신희’와 ‘신킨’로, 신광렬 선생은 ‘신희’와 ‘신희표’로 활동했다. 6년여간 일본과 중국을 서너 차례 다녀오고, 세월이 흘러 공개된 미국 CIA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지만, 본명과 이명을 이어줄 사료를 찾기가 힘들었다. 다행스럽게도 1959년 12월에 작성하신 <월남유서> 초간본에서 신흥균 선생의 이명인 ‘신희’이라는 문구를, 1930년 4월 간도총영사관 외무성 순사부장의 취조 기록에서는 신광렬 선생의 엄지 인장을 발견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Q | 청파 신광렬 선생이 저술한 <월남유서>란 무엇인가

“부친의 유서이다. 청파 신광렬 선생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다. 해방 직후 고향 땅에서 살고자 하셨으나 인(仁)이 없는 공산주의에 철저히 반대하시면서 월남하셨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치공작대 활동으로 북한에 파견되어 구국활동을 전개했지만, 북한 당국에 발각되어 겨우 몸만 탈출하셨다. 훗날 신광렬 선생은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당국으로부터 고문과 고초를 당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고, 그 충격과 죄책감으로 1959년 12월 <월남유서>를 작성하신 것이다. 다행히 아버님은 당시 7살이었던 제 큰형(신준식 재단

명예이사장)을 보며 마음을 되돌리셨다. 그리고 1969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일지와 유서를 남기게 된 심정과 고통을 자세히 담아 재간본을 만드셨다.”

Q |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두 어른의 서훈 관련하여 여러 조사활동 과정에서 제 자신에게 자문했다. ‘만약 일제 때 내가 태어났다면 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현재의 지위와 재산은 물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야 하며, 낯선 땅 만주에서 몇십 년 동안 북풍한설을 맞으며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과연 누가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살다 보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온다. 잠깐 눈을 감으면, 잠시 쉬운 길을 택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런 난해하고도 어려운 순간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무엇이 우선이며, 어떠한 길이 옳은 것인지 우리 선조들은 몸소 실천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신의 안위나 편안함을 깨뜨리면서 공동체를 위한 길에 자신의 삶을 던졌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작게나마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큰 목소리라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지고 더 공익적으로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익적 발자취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미래의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될 것이다.”

3·1운동 민족대표 김병조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김병기 희산김승학선생기념사업회 이사



독립운동가 김병조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에는 두 분의 병조(秉祚)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계셔서 때로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 한 분은 김병조(金秉祚, 1877.1.10.-1950.?) 목사요, 다른 한 분은 송병조(宋秉祚, 1877.12.25.-1942.2.25.) 목사다. 같은 한자 이름, 같은 나이, 같은 고향(평북 용천), 게다가 두 분 다 기독교 목사로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공통점이 있다. 오늘 소개하려는 분은 김병조 목사 이야기다.

민족대표로 3·1만세운동에 서명하다

1877년 평북 용천에서 부친 김경복과 모친 김해이씨 사이의 3남 중 2남으로 출생했다. 본관은 김녕(金寧)으로 백촌 김문기의 21세손이다.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고 애국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서북학회와 대한협회에서 활동하다가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해 목사안

수를 받았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유한 인물들이 이승훈·함태영·송병조·유여대 등이었는데 훗날 3·1만세운동 때 민족대표로 함께 참여했다. 1919년 2월경 양전백(梁甸伯) 목사의 집에는 김병조를 비롯해 유여대·양전백·이명룡 등 평북노회 소속 목사들이 모였다. 3·1만세운동의 계획을 듣고 기독교측 민족대표 선임을 위해 찾아온 이승훈의 주도하에 민족대표로 동참을 결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병조는 이승훈으로부터 3·1만세운동 계획을 전해 듣고 이에 찬동하여 유여대와 함께 인장(印章)을 이승훈에게 넘겨주었다. 민족대표로 서명 날인하는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다.

그는 고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기로 하고 2월 28일 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 교회와 사회단체에 통고문을 비밀리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그는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거행된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3월 1일 서울 시위 소식에 따라 오후 1시 평북 의주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다. 시위를 마친 그는 4월 13일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고, 제2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서 법제위원회 이사,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러다 돌연 임시의정원 의원을 사임했는데, 사임 이후에도 상하이 조선인교회 담임목사로 선출되어 국내교회와의 연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1923년 1월 유여곡절 끝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그는 비서장으로 선출되어 의장 김동삼, 부의장 안창호·윤해와 함께 회의를 주재했다.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

조선총독부에서는 영문판 선전물인 「Annual Reports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SEN (Korea)」을 만들어 배포했다. 일제의 한국침략과 식민지통치의 현실을 왜곡하고 외국에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국제연맹에 제출할 한일관계사를 편찬하고자 했다. 「한국인의 입으로, 한국인의 사정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병조는 이광수·김두봉·조동호 등과 조사·집필에 참여하고 마침내 「한일관계 사료집」을 완성했다. 제출 시일의 촉박으로 충분한 사료조사와 집필에 한계가 있었으나 어쨌든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3·1운동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병조는 일찍부터 일제에 유린된 민족의 실상을 모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일관계 사료집」 편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별도의 일제 침략과 3·1운동사를 저술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책이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이었다. 이 책을 교열한 박은식은 그 「서(序)」에서 김병조가 독립선언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3·1운동 이래 우리 민족의 유혈 참상과 일본인의 만행을 수집해 책을 만들므로 우리 민족 만대의 기념으로 독립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격려했다. 김

병조는 일제 침략의 구체적 계기를 '청일전쟁'부터라고 보았다. 특히 3·1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해 '개국 이래 처음 일어난 민족적 혁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은 민족대표의 1인으로 3·1만세운동을 올바르게 기록해야겠다는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상편(上篇)'이라 하여 후속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시베리아 유형장에서 세상을 떠나다

김병조는 1923년 4월 상하이를 떠나 만주로 거처를 옮겼다. 만주 무장투쟁 단체의 지도자로 추대되기도 하는데, 1924년 1월 김동삼과 함께 통의부 행정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5년 10월에는 육군주만참의부 고문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1933년 김병조는 만주생활 10년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귀국 후 일제로부터의 구속은 면하였으나 요시찰인물로서 특별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그는 고향인 용천지역 교회에서 해방 전까지 목사로서 시무한 것으로 보인다. 1938년 교단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자 모든 직무에서 은퇴하고 은둔생활에 들어갔다. 해방 후에는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과 맞서 반공광복단을 조직해 대항하다가 1946년 말 소련군에 체포되어 1947년 2월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유형(流刑)되어 그곳에서 1950년경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나이 73세 때였다.

김병기는 <독립신문>사장과 육군주만참의부 참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희산 김승학 선생의 손자이자 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장을 지낸 역사가 김계업 선생의 아들이다. 고려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해 단국대 대학원에서 독립운동을 전공, '참의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과 희산김승학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23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 기행 “청년 후손,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르다”

윤혜린 제4회 롯데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독립유공자 윤창만 선생 후손

어렵듯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티브이 옆에는 항상 액자에 담긴 한 장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집에 방문한 친구와 손님들은 매번 사진이 무엇인지, 표시된 인물은 누구인지 물어보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무언가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면서 찍은 사진이야!”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8월 11일, ‘2023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 기행’을 통해 드디어 나는 사진의 원본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3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들이 모여 천안으로 역사 기행을 떠났다. 장학금 수여식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였지만,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 다양한 계열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였기에 3·1운동, 임시정부, 학생운동 및 국내외 방면에서 활약하신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째 날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강연과 탐방이 진행됐다. 이번 기행은 독립기념관 측에서 장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어 더욱 특별했다. 독립기념관 탐방에 앞서 독립운동가들의 성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자신의 성격에 맞는 독립운동 유형을 알 수 있는 성격유형(DiSC)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로 ‘만약 내가 당시의 독립운동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 나의 검사 결과는 ‘I-관계형’이었는데, 문학 작품이나 연설 등으로 많은 사람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했으리라 예상해 보았다.

독립기념관 탐방은 DiSC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형에 맞는 전시관 위주로 진행됐다. 관계형의 대표 인물인 안중근 의사와 이회영 선생 등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이들의 공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독립기념관이 단순히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알리는 공간이 아니라 국내외 사람들의 문화 교류를 이끌며 우리나라가 가진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느껴졌다.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장학생 선조들의 독립운동 자료를 관람했던 미공개 수장고 탐방이었다. 그중에는 나의 증조부이신 윤창만 선생의 유묵과 2·8 독립선언서 등도 있었다. 특히 언제나 거실 가운데에 있던 1920년 임시정부 신년 축하식 기념사진 원본을 직접 볼 수 있음에 감회가 새로웠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던 증조부의 독립운동 활동을 생경한 기록물을 통해 만나보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자료들의 기증과 보존의 힘쓴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둘째 날에는 조별로 유관순 생가 기념관, 병천 아우내 장터, 이동녕 생가 및 기념관을 탐방했다. 단순



히 독립운동 사적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는 미션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해 깊게 고찰할 수 있었다. 각기 다른 네 곳의 사적지와 네 개의 질문이었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답은 바로 ‘연대의 힘’이었다.

미션을 하면서 나는 조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우리가 만약 일제강점기에 17살의 학생이었다면 유관순처럼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을까? 한 조원은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동기는 무엇일까? 내가 찾은 답은 앞서 언급한 ‘연대의 힘’이었고, 그 기저에는 대의를 위한 거창한 희생보다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소망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동녕 생가에는 ‘산류천석’이라 쓰인 기념비가 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큰일을 이룬다는 함의가 담겨있다. 독립기념관 해설가는 독립운동가분들의 활동을 ‘흐르는 물’로, 독립을 막는 일제를 ‘바위’에 비유했다.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막았던 또 하나의 바위는 국민이 독립운동을 하며 겪게 될 고난과 일제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럼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쳤고, 이런 모습은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을 고무시켰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마음이 모여 폭포처럼 거세진 물줄기는 일제라는 바위를 뚫고 해방과 자유에 이르렀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기행의 마무리로 독립기념관 내 추모의 자리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헌화를 했다. 추모의 자리로 향하는 105개의 계단은 일제의 애국지사 탄압사건인 105인 사건을 상징한다. 또 중앙에는 “피땀으로 지켜 이 터전을 물려주신 가신 임들의 고마움을 되새겨 겨레여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105 계단을 오르고 헌화와 묵념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고결한 민족정신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번 기행은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그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일깨워 주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한 나라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했다. 일제의 숱한 무력 진압에도 선조들은 우리말과 전통을 지켜왔으며, 국민 모두는 그들의 열과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애국으로 뭉친 연대의 힘은 곧 문화와 가치로 형성된 국력이 되어 우리나라를 성장시킬 것이다. 또한, 그 발걸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독립유공자 후손인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

100년 전 조선인 희생자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日 정부 사죄·반성 없이 미래는 없다

글·사진 이승현 <통일뉴스> 기자·<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장면. (동농기념사업회 강덕상자료센터 제공)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비롯한 간토(關東)지방을 강타한 지진은 유난히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에서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이었다. 리히터 척도 7.9 규

모의 강진으로 수십만 채의 가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불길은 강풍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번져갔다. 술한 사람이 깔려 죽고 불타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지진 발생 당일 도쿄 궁성앞 광장에 30만여 명의 피난민



지난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야미초 위령공원 추도비 앞에서 재일 도쿄 동포들이 주관한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 100년 도쿄동포추도모임'이 거행됐다.

이 모여드는 등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지진을 '진재'(震災, 지진재해)로 표현하는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날,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해 매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간토대지진은 단순히 자연재해 예방의 날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지진 발생일인 9월 1일부터 2주 남짓한 기간,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아래 재일 조선인 체류자 최소 6천여 명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학살되는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가 벌어졌다. 그날의 참혹한 학살은 일본 정부 내각과 군부, 경찰이 개입하고 민간 자경단을 부추겨 너무나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곳곳에서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목격담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조선인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년 전 비극이 끝나지 않은 이유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맞아 9월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의 요코야미초 공원 추도비 앞에서 일본의 진보적 시민단체인 '일조협회'(日朝協會)와 재일 도쿄 동포들이 주관한 추도모임이 거행됐다. 추도제가 열린 요코야미초 도쿄 도립공원은 1923년 간



요코야미초 공원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희생자를 위한 추도비.

토대지진 발생 한 해 전 육군 피복장이 있던 곳으로, 당시 많은 지진 피해자들이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가 때맞춰 불어온 강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1930년 9월 간토대지진 피해자 위령당을 만들고 이후 도쿄 대공습(1945.3.10) 희생자들을 안치해 위령공원이 되었다. 50주기인 1973년 도쿄도 의회의 찬성으로 '조선인희생자추도행사 실행위원회'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에 대한 추도행사를 진행했고 추도비도 이때 세워졌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다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인 셈이다.

100년 전 지진 발생 시각인 오전 11시 58분 추도 묵념을 기점으로 오전엔 일조협회가 주축이 된 '9.1 관동대진재조선인희생자추도식전실행위원회'의 추도식이, 오후 1시 30분부터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도쿄도본부와 도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주최한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 100년 도쿄동포추도모임'이 진행됐다.

추도식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발족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에서 추도문을 보내왔다. 재일동포를 대표해 고덕우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1923년 9월 1일 도쿄를 비롯한 간토지방을 뒤흔들어 놓은 미증유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9월 2일 오후 일본 도쿄 소재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한국중앙회관 8층 강당에서 '무엇이 시민들을 학살로 몰고 갔는가?-간토대지진의 비극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간토대지진 100주년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의 대지진과 대화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들을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하였다"며, "열흘 남짓한 기간에 6천600여 명의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일제에 의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국제법이 엄금하고 있는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라고 강조했다. 대지진으로 혼란에 빠진 와중에 재해대책에 전념해야 할 일본 당국이 '조선인 폭동설'을 유포하며 전시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대와 경찰이 동원됐고, 조선반도에서 동학농민군(1894년), 3.1운동 참가자(1919년), 의병(1920년~) 등을 상대로 총칼을 겨눴던 재향군인들을 중심으로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혹한 살육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일본 당국은 한편으로 조선인 학살을 직접 지시하고는 계엄령 발령상태에서 조선인 학살 관련 보도를 통제하고,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조선인학살에 대한 책임은 민간 자경단에 떠넘겼다가 곧 학살 가담 자경단원들을 방면하고 몇 년 후에는 훈장으로 포상하기까지 했다.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는 추도사를 통해 "(간토대진 당시)허위사실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조직적으로 (조선인을)학살하였음에도 피해

사실을 조사할 계획도, 유감을 표시할 의지도 없다고 밝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면 이 얼마나 반인도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거부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을 무력화하여 다시 '전쟁하는 국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 스타 이상 간토학살의 국가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 △간토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 △전쟁하는 국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군사대국화 정책을 당장 멈출 것 등을 촉구했다. 북측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추도문에서 "민족의 수난자들을 마음에 안고 사는 조국 인민들과 재일동포들, 인륜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의 위로 속에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들의 영혼들이 부디 안식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달리 양심적 일본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곳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발언이 나왔다. 기쿠치 이사오(菊地功) 가톨릭 도쿄 대주교는 이날 "100년 전에 일어난 생명에 대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의 역사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

를 향해 힘을 합쳐 생명을 지키는 것을 맹세하고 세계의 평화,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바친다"는 추도문을 발표했다. 나가자미 코코(中島 京子) 소설가는 100년 전 간토 조선인학살에 대해 "일본사회에는 차별의식과 표리일체된 외국인에 대한 공포가 지금도 존재한다. 외국인은 '범죄예비군'이라는 편견은 국가 행정이나 법의 이면에조차 숨어 있다"며, "이 편견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백 년 전의 학살을 과거의 일로 묘비에 담을 수 없다. 여러 번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가 필요하다. 9월 1일은 그런 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의 고백을 들려주었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는 절망적

지난달 18일 『관동대지진 '학살부정'의 진상』(도서출판 삼인) 번역 출간하기도 한 와타나베 노부유키 전 아시히신문 역사전문 기자의 고뇌는 더욱 깊었다. 추도제 이튿날인 2일 오후 도쿄 소재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한국중앙회관 8층 강당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주년 심포지엄에서 와타나베 전 기자는 지난 2009년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가 발표한 '재해 교훈 검증에 관한 전문조사회' 보고서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를 든 다수자가 비무장 소수자를 폭행한 끝에 살해에 이르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 살상의 대상이 된 것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다.", "살상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의 정확한 수는 없지만 지진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1~수 퍼센트에 해당하며, 이는 인적손실의 원인으로 보기에 경시할 수 없다."(이상 위 전문조사회 보고서)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6월 간토 조선인학살을 입

증할 문서가 방위성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열린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 없다'는 태도로 회귀했다. 내각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일 뿐 정부의 견해는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와타나베 기자는 당시 유포된 유언비어의 핵심은 '무장한 조선인이 집단적으로 습격한다'는 것이었으며, '(일본)민중의 자발적 의지만으로는 자경단의 횡포가 탄생할 수 없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선인 살해에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높은 '선동', 그리고 '무기'가 주어졌다'고 국가개입과 책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언론보도와 소학교 6년, 고등과 1년 학생들의 기억이 반영된 작문 자료 등을 근거로 '조선인 폭동설'이 강력하게 유포되었으며, 조선인 박해와 학살의 정도도 명백하다고 확인했다. 또 학생들의 작문을 검토한 뒤에는 "유언은 근거 없는 허보였으나 지진 재해 반년 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살이 유언비어를 믿고 자행된 민족적 박해였다는 자각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옳은 것이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은 루머나 '무서운 조선인 인상'은 바로 잡히지 않고, 자각과 반성 없이 다음 전쟁의 시대가 준비되어 간 것 같다"고 가슴 아픈 결론을 내렸다. 희생자인 조선동포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일 저녁 한일우호를 기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재일동포들이 '조선인학살희생자추도와 책임 추구를 위한 집회'를 열어 일본 정부에 '모든 공적기관의 당시 서류를 재조사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규명팀을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요청서를 발표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는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죄·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

어느 청년의 번아웃 경험기 : 좌절 이후 우리는 무엇 하고 있나?

박혜정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수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던 사람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갑자기 의욕을 상실해 버리거나, 열정과 성취감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증상.

최근 AI(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찾아냈다. UI/UX 디자이너, 모델, 지휘자 등이 있었다. 그중 아무래도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은 조주기능사(바텐더)였다. 역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기술이나 배워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까?

남북관계가 파탄 나면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관련 업무를 하는 청년들은 큰 고민에 빠져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힘을 쏟은 이유일까 아니면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현재 번아웃 상태이다. 과거에는 꿈에서라도 로또에 당첨돼 인생 역전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이제는 꿈에서 로또 사러 가는 것도 힘이 든다. 요즘 사회를 보니 이는 꼭 특정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2030 청년 세대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라나 뭐라나.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지같은 기분을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처방부터 해서 일단 소생부터 시키겠다는 행태다.

우리는 좌절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희망차게 이끌어 나갔으나 희망은 좌절로 끝이 났고 윤석열 정부는 이 좌절을 거름 삼아 담대한 구상을 펼치고 있다. 좌절의 시간은 최소 4년은 더 남았다. 그럼 우리는 이 4년을 좌절의 기분만 만끽하며 보낼 것인가?

우리는 왜 처절한 좌절을 맞보고 끔찍한 번아웃을 경험해야 하는가? 나는 그 원인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좌절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남 탓만 주구장창 해왔다. 미국이 방해해서, 정부가 잘 못 돼서 등등 우리가 좌절할 이유는 꼭 외부 요인에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해왔다. 정말인가?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남과 북 두 당사자가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하는 관계다. 여기에서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참견하고 휘방하는 것들도 다양하다. 다시 말해 우리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결



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남북관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마주하고 이해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하물며 북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줄 생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남 탓만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좌절과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에 번아웃 극복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우리가 왜 아픈지, 왜 고통을 겪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점,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남 탓은 가려운 곳을 긁어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지만 결국 상처는 덧나고 본질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가려운 곳을 긁어 상처를 계속해서 내기보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좌절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성취감은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취로도 느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번아웃, 불안장애, 우울증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북한을 공부하고 관련 일을 하는 청년들도 겪는 고통이며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통을 느끼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적어도 나는 정서적 성취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정서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지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번아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명으로서 북한뿐만 아니라 직업, 별이로서 북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북한 업계는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곧 폐업 상태로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일까? 번아웃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결국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과거를 후회해 봐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순간의 선택은 내가 했고 결과도 내가 만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번아웃을 극복하는 것도 나의 몫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아직 이 번아웃을 극복할 의지가 없다. 번아웃을 극복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다. 이 업계에서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번아웃은 이렇게 돌고 돈다. 우리는 좌절과 번아웃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의 이야기

채승재 원불교청년회 부회장

얼마 전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화의 장에 초대되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030세대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름 원불교 청년회 대외협력 부문을 담당하는 부회장으로서 수년 간 민화협 청년위원회,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주평통 위원 등을 통해 다양한 통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청년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었는데, 요즘의 세태 속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대외활동을 제외하고,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에게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때, 특히나,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통일에 대한 이슈를 논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지 않은 한,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때 평범한 일은 아닌 듯하다. 특히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도 살기 힘든 현실인데 통일이 된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밀레니엄 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앞선 통일에 대한 국익과 민족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통일반대론자라는 말이 아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

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통일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먹고 사는 문제인 '취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행복'에 대한 고민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통일'에 대한 화두를 먼저 꺼내든 이유는 오늘날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이 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통일담론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에 대해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슈보다 평화 담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 담론이 지나치게 민족주의나 통일지상주의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통일은 평화의 하위 명제다. 평화와 통일은 같은 선상의 용어가 아니다. 통일은 평화라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남북문제를 접근할 때, 남북통일이란 명제를 내려놓고 보편적인 동아시아 평화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냉전반공주의만큼 통일지상주의도 과거 패러다임이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세계주의적,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첫째, 남과 북이 서로 은혜의 관계임을 자각해야



한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사상의 핵심은 은혜이다. 우주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니 서로 감사하고 보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분열과 대립으로 은혜로운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북한이 안정되어야 남한도 안정되고, 북한 동포들이 행복해야 남한 동포들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인과의 이치이고 은혜의 원리이다. 남북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은혜의 관점으로 남북관계를 보아야 한다.

둘, 은혜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은혜의 관계는 호혜의 교류를 낳는다. 또한 호혜의 교류를 촉진하면 관계 역시 더욱 좋아진다. 상호 비방 전단지를 날리는 식의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남북은 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인과는 거래이고 주고받음이다.

셋,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주변 관련국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민족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다. 역대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서로를 은혜의 관점으로 보고 은혜의 교류를 이어갈 때 사이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청년이 많아지는 시기에 통일의 꿈을 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해지고 있다. 중국의 문학가 루쉰은 그의 저서 고향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위에 난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도 희망과 닮아 있다. 소수지만 통일의 꿈을 꾸는 청년이 통일의 길을 내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통일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통일의 꿈을 꾸게 되고 실제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이뤄낼 것이다. 🌍

사할린 2세 사진기자 이예식

우리들의 해방은 아직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다



글 편집부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광복 78주년을 맞아 작지만 의미 있는 사진전이 지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진행되었다. 사할린 <새고려신문> 이예식 기자의 사진전 ‘사할린, 기록되지 않은 역사’였다. 사할린 2세인 이예식 기자는 자신의 삶과 함께 해온 사할린 동포의 생활사를 꾸준히 기록해왔다.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다가오는 사할린 동포들의 삶. 우리는 그들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알고 있을까. 그리고 노(老)기자는 우리에게 사진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8월 15일 이예식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할린, 기록되지 않은 역사’ 사진전은 KIN(지구촌 동포연대)가 2014년부터 제작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10주년을 기념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다가오는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1949년 사할린 마카롭시에서 태어난 이예식 기자는 1973년부터 사할린 주 언론계에서 프리랜서 사진 기자로 활동하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새고려신문> 사진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할린 2세다. 사할린 1세인 부친의 애환을 보며 자란 그는 자연스레 동포들의 삶을 기록해왔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1997년 체호프상, 국제 인터넷사이트 포토콩쿨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KIN의 10년 동안 이어진 달력 기증이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매년 사할린 동포만을 위한 달력을 만들어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고국의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다. 그러다 달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할린을 찾은 김지연 다큐멘터리 작가(갤러리 인덱스 대표)와 인연이 되어 2016년 사진집 <귀환>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미 2002년 서울과 일본 삿포로, 2003년 일본 오사카, 2003년~2009년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 등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지만, <귀환>을 통해 국내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귀환> 출간과 동시에

2014년 김지연 작가와 2인전을 열었고, 2017년에는 부산에서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여전히 미완인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이예식 기자는 말수가 매우 적었다. 우리말이 다소 서툰 탓도 있겠지만, 말보다는 사진으로,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대학에선 건축을 전공했지만, 사진을 참 좋아했어요. 취미로 시작한 거지. 그러다 프리랜서 기자로 러시아 언론사 등에서 일하게 됐는데, <새고려신문>에서 함께 일하자고 해서 1989년부터 하게 됐지. 어찌하다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네(웃음).”

무슨 거창한 뜻을 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부모세대, 그리고 내 이웃과 자녀 세대들의 삶을 담고자 했다. 기회가 닿아 조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자신의 사진을 통해 사할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알게 된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시된 사진들은 사할린 동포들의 일상을 담은 것들도 있었지만,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들이 더 많이 다가왔다. 아니, 일상을 담은 사진들도 모두 그들의 애환을 담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사할린에 이주하게 된 동



사진전에는 1945년 8월 일제에 의해 학살된 동포들을 위한 추념비를 세우고 해마다 추모제를 갖는 사할린 동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포들의 귀환 사업의 역사 역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KIN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과 소련의 국교회복으로 2차 일본인 귀환이 이뤄질 때,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 1500여 명이 일본으로 귀환했다. 1958년 1월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이미 한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고자 작성한 탄원서였다. 그 후 일본에 귀환한 동포들은 사할린과 한국이 이산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 편지들을 바탕으로 귀환희망자명부를 만들 수 있었고 이는 영주귀국사업의 중요한 근거이자 촉매제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5년 한인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사할린 재판'을 일본에서 시작했고, 일본의 지식인, 정치인들도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영주 귀국 시범사업을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과 합의한 500세대 임대아파트 부지 선정이 늦어졌다. 결국 춘천 '사랑의 집'과 재일동포 독

지가의 도움으로 1993년 문을 연 '대창양로원'으로 우선 영주귀국을 시작했고, 인천의 '사할린 복지관'에 이어 2000년 안산 '고향마을'로 입주가 시작되었다. 50여 년이 지난 늦은 귀향길이었다. 사할린 1세인 이 기자의 부친도 안산 '고향마을'에서 말년을 지내다 재작년 작고했다. 하지만 한일 적십자가 발표한 영주귀국의 대상과 조건은 동포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 이주나 태생으로 한정된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도 2인 1가구였다. 영주귀국 대상이더라도 혼자인 사람은 양로원으로 가거나 짝을 맞춰야 했다. 염원했던 귀향길이 이제는 자녀들과 헤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산이 된 것이다. 귀국자들은 24개 지역에 뿔뿔이 나뉘 각자 알아서 적응해야 했다.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 귀국을 포기한 이들 또한 박탈감을 느껴야만 했다.

최상구 KIN 사무국장은 "사할린 한인 문제는 70년이 넘는 세월만큼이나 해묵은 과제이고, 복잡한 문

제"라고 말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풀어야 할 외교문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영주귀국 동포들이 르기까지 다층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주귀국 대상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사할린 한인 역사 복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부재하다. 현행 사할린 동포법상 영주귀국 대상은 사할린동포(기존의 1세)와 배우자, 직계존속 1인과 배우자다.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했다. 하지만 대상을 동반가족 개념으로 한정해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자녀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할린 동포와 결혼해 한국에 영주귀국한 배우자 중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배우자의 자녀들이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할린 한인에 대한 자료들이 비밀 해제되어 공개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역사 복원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영주귀국 대상을 기존 350명에서 270명으로 줄였다. 동포들에겐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문제는 단순히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의무를 지금이라도 다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의 역사성과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진전을 기획한 김지연 갤러리 인덱스 대표는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

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1945년 8월 15일이 우리에게겐 해방의 순간이었지만, 일본에겐 패전의 날이다. 당시 사할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한마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모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자료들이 러시아 기밀문서 해제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어디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 차원의 추모비나 위령비 하나 없다. 일본은 사할린에 전사 혹은 다른 이유로 사망한 자국민을 추모하는 거대한 위령비를 세워두고 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일까? 사할린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자체적으로 위령비를 세우고 해마다 추모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맞을까? 현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양보로만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한 광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진정 해방되었는지 이 전시회를 통해 묻고 싶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예식 기사는 현재 사할린의 모습을 텅텅히 이야기했다. "1세대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3, 4세대들은 대학 졸업 후 대부분 대륙(러시아)로 떠나 그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어. 내 딸은 사할린에 남아 그래도 얼굴은 보고 지내지. 남아 있는 2세대는 나처럼 다 70이 넘는 노인네들뿐이야.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도 많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네.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조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우리가 사할린에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만은 꼭 전하고 싶어. 난 정치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저 지난 역사의 아픔을 서로 잘 치유하고 앞으로 살아갈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닐까."

2023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기행 “청년 후손,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르다”

김민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청년후손들이 독립운동 역사 탐방에 나섰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이 주최하는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선발된 장학생 중 37명의 대학(원)생 후손들이 “청년 후손,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르다”를 주제로 천안 지역 독립운동의 현장을 찾았다.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과 민화협(대표상임의장 손명원)이 주관하고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천안 독립기념관 등에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인사말에서 자신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업적에 대해 소개했다. 손 대표상임의장은 “분열을 일삼지 않고 힘을 모아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크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후손 여러분들이 각별히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의 성과: 대한민국의 건립”을 주제로 한시준 독립기념관 관장의 특강이 있었다. 한시준 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세워진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독립기념관 수장고에서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들의 사료 원본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주어졌다. 이를 위해 독립기념관 측은 민화협으로부터 사전에 참가 장학생 선조들의 명단을 받아, 기념관 내 수장고에서 한 명 한 명의 자료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이었던 류자명 선생 자필 수첩, 자필 회고록을 포함 광복군들의 친필이 쓰인 태극기 등이 있었다. 또 이번 기행에는 권재학 지사 후손인 러시아 국적의 장학생과, 천안지역 독립유공자 김구영 선생의 후손도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민화협은 롯데장학재단과 함께 이번 역사기행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 지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사(史) 교육과 독립유공자 후손들 간 커뮤니티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화협 제13기 집행위원회 출범

편집부



민화협 제13기 집행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4월 28일과 8월 23일 두 차례 집행위 회의를 열어 총 26명의 집행임원들이 최종 위촉되었다. 13기 집행위원회는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과 통일문제에 적극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12기에서 13기로 연임한 위원이 11명, 새로 임명된 위원은 15명이며, 민화협 해외협의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소

통위원장직을 없애고 국제교류위원장직을 신설했다. 청년미래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김경운 대한결핵협회노동조합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통일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화협 집행위원들, 사무처와 잘 어우러져 통일과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을 잘 모아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13기 집행위원회 (** 신임 위촉)

집행위원장

- 박병규 전 중앙일보 기자
-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실장
- *박중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황금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평화통일 분과 수석부위원장

정책위원장

- 김성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윤지현 (재)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 · 미국 변호사
-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여성위원장

- 서옥영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청년미래위원장

- *진창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정책실장
-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
- *김경운 대한결핵협회노동조합 위원장
-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

문화예술위원장

- 허성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사무총장
-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문화단체총연합 사무총장

통일교육위원장

- 박현선 한국가족문화원 원장
-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회원사업위원장

- *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

노동위원장

- *이봉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 *문창호 기술보증기금노동조합 위원장

의료보건위원장

- 서정성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
-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국제교류위원장

-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

체육교류위원장

- *백은상 트윈이노텍 대표이사
- *임성섭 남북체육교류협회 상임고문

<민족화해> 편집인

-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민화협 사무처

- 이시중 사무처장

‘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

김진욱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민화협은 2019년부터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족화해>는 본 사업에 선정된 우수 논문을 한 편씩 요약하여 소개한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소원이 진정 통일인지, 통일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늘어가고 있다. 남북한 사람들이 분리된 삶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오래도록 살면서 한민족인 우리의 의미를 점차 잃고, 또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주민이 타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독일의 통일 경험은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심어주었다. 분단국가에서 동질성 회복에 대한 관심은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사회적인 동력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동질성 회복 담론의 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의 공통된 역사적·문화적 뿌리를 보존하고, 분단의 시간만큼 달라진 삶의 방식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질성의 완전한 회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동질성 회복을 향한 노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는 압력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동질성 회복 담론의 목표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한 것이다.

‘동질성’에서 ‘동질감’으로

남북한 동질성 회복 담론은 분단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히기 위해 동질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동질성은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관찰 가능한 문화적 속성을 대체로 뜻한다. 그리고 동질성을 논의하는 단위는 민족을, 동질성 회복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의 정체성은 수평적 동지애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동지애(fraternity)를 지니는 관계로 표상된다. 민족 정체성은 문화적 속성과 문화에 기반을 둔 행동방식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우리로서 공유하는 친근감을 뜻하기도 한다. 기존 관점은

대체로 전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다만, 동질성 회복으로 진정 도달해야할 지점은 동지애의 복원이며, 이는 남북한 주민이 다시 서로 우리로 느끼는 동질감(sense of we-ness)의 회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단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통한 양측 주민의 공존은 오래 묵은 다름 위에서 우리를 다시 정립시키는 노력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와 같다면 동질성 회복 담론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질감 형성의 사회적 조건

동질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은 인정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정은 개인 혹은 집단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긍정하는 의사표시로 확고한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된다. 동질감 형성은 민족 정체성 형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인정이론을 분단국가의 사회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동질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거나 혹은 다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동질감의 토대는 공유된 정체성이다. 공유된 정체성은 공동체의 경계선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이 전제되고, 소통을 위한 의미론을 공유하는 토대 위에서 형성될 수 있다. 공동체는 ‘대화의 망’으로서 역할을 한다. 분단은 대화의 망을 분리시킨다. 대화의 망이 단절되어 삶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윤리와 도덕

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념적 갈등이 초래한 분단의 현실에서 분단국가의 주민들의 병존은 서로 다른 원칙과 규범의 구속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이질적인 윤리와 도덕의 구속력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을 수반한다. 갈등은 동질감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어도 갈등이 분열과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토대로서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신념이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지위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상호 인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분단은 사람들을 서로 다른 원칙과 규범 위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사건인데 반해, 통일은 하나의 기준 위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화의 망 안에 공존하려면 공동체의 성원으로 적격한 가치와 지위를 지니는 존재로서 서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다만, 적격성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경계에 속하는 것만으로 자신과 달리 살아온 사람들을 진정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질감 형성을 위해 동등성 인정도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에?

분단은 현실이고, 통일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이 공존하는 현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존은 통일 이후 마주할 현실과 같지 않더라도 장래의 문

제를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먼저, 남북한 주민들에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의미와 가치를 점점 잃고 있다.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연구원의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남북한 사이의 평화공존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통일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25.4%인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있다. 한편, 남한 사회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은 2019년 조사에서 남한에 살면서도 남한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30%만이 동의했고, 남북한체제를 혼합해야 한하는데 약 23%가 동의했다. 2014년 남한체제 중심의 통일에 약 50%가 동의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남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한반도 공동체를 더 이상 지향하지 않게 되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은 공동체의 미래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적격성과 동등성 인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을 남한 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4.7%로 나타나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60.6%의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민족이 아니라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도드라졌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3%로, 친근감을 느낀다는 27.0%의 응답자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 출신 이주민에게 36.7%,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이주민에게 24%의 응답자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과연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민족적 애



착이 특별히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적격성을 인정하여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도 이질감은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 받아들이지만, 이들이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학교교사, 지역대표 등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출신주민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지만, 북한출신주민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즉, 적격성을 인정하더라도 동등성 인정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이 자신에게 느끼는 이질감을 경험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구성원으로서 적격성 인정에 민족은 더 이상 중요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동등성 인정에도 상당부분 유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장기화가 야기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Covid-19가 만들었던 물리적 장벽, 정치적 영역에서 남북 대화의 단절 등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한 바람직한 현실을 구성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자,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동질감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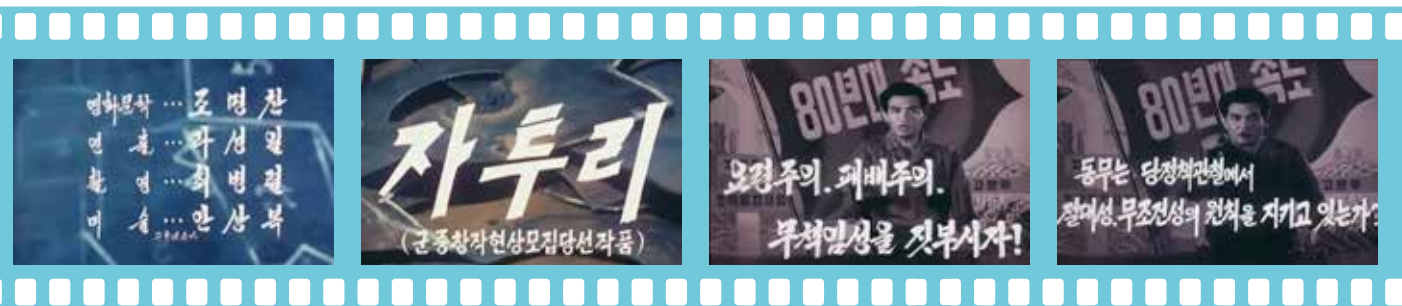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이 현재 함께 만들고, 장차 함께 만들어 가야할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지위와 가치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고 확장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 건설과정에서 개개인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며,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민족의 영역도 국가와 유사하게 개개인의 자율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좁다. 따라서 이질적 사람들이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영역이 필요하다.

비록 남북한 주민은 분단 상황에 있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넓혀가야만 한다. 🌈

자원을 흥청망청 쓰지 말자 <자투리>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북한연구학회 회장

<자투리>라는 영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자원 절약을 주제로 한 20분 길이의 영화이다. 시작부터 전달하려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첫 장면부터 인상적이다. '80년대 속도' 깃발을 배경으로 건장한 남성이 등장하여, 손가락을 들어 지적하면서 굳센 말투로 내뱉는다. “동무는 당정책관찰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요령주의, 패배주의 무책임성을 짓부시자!” 시작부터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시작한다.



그렇다면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으로 잘 지켜야 할 당 정책은 무엇일까. 바로 자원 절약이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거대한 기증기 위에 붉은색 바탕의 현수막에 쓰인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구호가 클로즈업된다.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절약하여 더 많은 물자예비를 마련하자!>는 선전화를 비춰준다. 이 선전화는 만수대창작사 출판화창작단 소속 김영일이 1992년에 창작한 선전화이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영화 속 장면이

고, 오른쪽은 선전화 원작이다. 손의 위치가 달라지는 했어도, 작은 나사, 실 조각, 석탄 한 조각이라도 아끼고 아끼자는 의미는 한 가지이다.

영화 <자투리>는 영화문학으로 조병찬이 나오기는 하지만 ‘군중창작현상모집당선작품’이다. 북한에서는 기념일이나 명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현상 모집을 진행한다. 인민들에게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관심을 끌기에는 일반 공모라는 형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계기



가 되기도 한다.

현상 공모 작품의 스토리는 대체로 일정하다. 당의 정책을 충실하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던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당의 의도를 온몸으로 받드는 충직한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구성이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웃음거리가 된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거나 그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 이 과정은 코믹하게 그려진다. 한바탕 웃음으로 화해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당 정책을 받들자는 의도가 반영된다.

김동식 직장장의 자재 관리

<자투리>의 창작 배경이 된 곳은 철공 공장이다. 직장장 김동식은 당 정책 관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장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자재 관리였다. 사방에 넘쳐나는 철판을 보면서, 자재를 아낄 생각이 별로 없다. 결국 자재관리를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다가 큰 망신을 당하게 된다.

김동식 직장장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각종 철판을 가공하기에 여념이 있다. 일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재단 작업이 늦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호남이를 불러 독촉한다. “호남이 강판을 올리라

고”, “재단이 딸립니다”, 재단이 늦어서 올릴 수 없었다. “꾸물대긴 빨리 다그치라고 해”, 호남이가 달려가서 재단을 독촉한다. “영철동무, 직장장 독촉이 불같아요.”, “유능한 재단사도 열 번 재단하고 한 번 절단한다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동식이 달려왔다. 강판에 여러 사람이 붙어 재단하고 있었다. “영철이 강판 하나에 한 사람씩 붙으라고”, 하지만 강판 하나에 여럿이 붙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거 자투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자투리 때문이었다. 이 말이 직장장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지 말고, 강판 하나에 한 사람씩 붙어서 재단하라’고 다그쳤다. 속도는 빨라졌다. 하지만 이런저런 자투리 강판이 쏟아졌다.



그렇게 작업을 한바탕 하고, 휴식 시간이 되었다. 시원하게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돌아보는 데, 아불싸 아직 27번 모서리 작업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된 거야?”, “예. 영철동무가 재단하러 갔습니다”, “그 동무는 참. 언제봐도 꾸물거린단 말이야” 직

장장이 영철을 찾아 나섰다. 영철은 남은 철판을 이리저리 맞추어 보고 있었다. “12시에 검사에 넘기기로 했는데, 뭐하고 있는 거요?”, “예. 이거 때문에 새 철판을 꺼낼 수도 없고, 자투리로 붙여 볼까하구요...”, “왜? 강판이 다 떨어졌소?”, “예. 이제 다음 달에 쓸 철판도 딱 한 장 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들이 철판을 다 어디에다 썼소?”, “철 집을 짓느라고 쓰고, 또 사람들이...”, “철 집이라니. 철 집이야 자투리로 쓰지 않았소”, “그렇다면, 그 철판들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직장장이 자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있는 자재로는 철 집을 짓는다고 써버렸고, 아끼지 않고, 필요하면 다음 달 것까지 당겨 썼다. 그 결과 이번 달은 물론 다음 달에 써야 할 철판도 다 쓰고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동식은 별다른 생각이 없다. 재료를 또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 달에는 또 받아 올 게 있으니까. 우선 새 철판으로 작업을 하오”, “자재과에

서도 강판 때문에 늘 말이 있던데.”, “자재과야 늘 따따부따 말을 하지. 그 친구 말만 듣고는 어떻게 일하겠소. 자, 재단은 내가 할 테니. 동무는 자재과에 가서 다음 달 강판을 가져오라.”



영철을 자재과로 보낸 동식은 새 강판에 27번 모서리를 재단하려고 하였다.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그 왜, 내가 부탁한 게 있지 않은가? 오늘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제 보아도 강판이 한 장 더 있어야 하겠어.” 식당 아주머니는 식당에서 관리하는 축사에 필요한 강판을 부탁하였다.



동식은 거절한다. 영철에게 들었던 핑계를 대었다. “이젠 안 돼요. 자재과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데...”, “아니 한다하는 직장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쪼그라졌우. 그러지 말고 자재 한 장만 더 주지요.”, “안 돼요.” 동식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

“정 이럴 거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겠소. 내가 뭐나 좋다고 이려오. 전투원들의 밥상에 푸짐한 고깃국을 올리자는 것인데.” 그 말에 동식은 선심 쓰듯이

말한다. “에이 참. 이걸 자르면 저쪽을 가지고 가구려...”하면서 큰 쪽을 내주었다. “아니 이 큰 쪽을...”, “예. 우린 이 작은 쪽을 쓸 거니까. 큰 쪽을 가지고 가슈.” 자투리 철판 조각을 얻으러 왔던 식당 아주머니는 뜻밖에 큰 철판을 얻게 되었다. “내 얼른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겠소”하고는 ‘피썰새’ 담배 한 갑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흥청망청 자재를 사용한 결과

식당 아주머니를 보내고, 27호 재단을 하고 있을 때, 영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직장장 동무. 이거 야단났습니다. 자재과에서는 이번 달 자재소비통계표를 내기 전에는 새 철판을 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 온 자재과 담당은 직장장이 아는 옥심이였다. “뭘. 옥심이가.”, 직접 나서기로 하였다. “내가 가서 자재소비통계표를 작성해서 보낼 것이니까. 동무는 자재과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 오지요. 그리고 이 철판은 호남이에게 가져가서 조립하라고 하시오” 그렇게 지시를 한 동식은 옥심을 찾았다.



옥심이는 이곳저곳에 버려진 자투리 철판을 모아 지게차로 옮기고 있었다. 동식은 옥심을 설득하였다. “동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형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이에요. 자투리를 모아가다 쓰는 생활직장과는 다르단 말이요.” 하지만 옥심은 ‘통계표 없이는 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동식은 휴게소로 오면 주겠다고 하였다.

동식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달이 났다. 식당에서는 아주머니 말을 듣고 철판을 가지러 두 사람이 왔다. 그런데 철판이 두 개였다. 어느 것을 가져갈지 몰랐다. 동식이 재단한 철판에는 분필로 27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자투리’ 철판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는 동식이 재단한 철판을 가져갔다. 이어서 호남이가 왔다. 호남이는 재단 모양도 그렇고, 27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은 것이 이상하였다. 하지만 동식이 직접 재단하였고, 마지막 철판이라 특별히 숫자를 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12시 완공에 맞추어 설비를 받으러 자동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설비는 완성되지 못했다. 직장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이곳저곳에서 철판 자투리를 찾았다. 자재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재단을 함부로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직장장은 이후로는 자재를 절약하게 되었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올해 제27대 북한연구학회장을 맡았다. 북한 사회문화 및 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펴낸 국내 최고의 북한 문화예술 전문가이다.

‘선 보는 날’의 중의성, ‘신상 구두와 신랑감’ 첫선 보이기 - 광금철의 ‘선보는 날’ 론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 문학평론가



북한의 결혼식 풍경 ©연합

1. ‘선 보는 날’의 다의성

광금철의 단편소설 「선보는 날」(『청년문학』, 2022. 10)은 『청년문학』에 게재된 동시대 청년들의 맞선 이야기를 배경에 담고 소비재의 일종인 구두의 불량품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에피소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항의가 그러지고 판매자의 애프터서비스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2020년대 북한 사회의 현재적 일상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배면에는 처녀와 총각이 양가 부모에게 서로를 선보이는 결혼 풍속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

북한에서의 결혼은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사회주의 대가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특성상 ‘사회의 세포’로서 ‘사회의 가장 말단 조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작품의 제목인 ‘선 보는 날’은 중의적 의미로 활용된다. 즉 작품 도입부에서는 첫 번째로 주인공인 구두 공장 지배인이 딸의 배우자감을 집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맞선’의 의미이고, 작품 중반 이후로는 두 번째로 신상 구두 제품을 지배인 부임 6개월 만에 전시회장에 선보이는 날이라는 의미를 띤다. 나아가 작품 말미에 가면, 이 두 가지 의미가 겹쳐지면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더 완벽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배인의 책무와 자세가 새로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세 번째 ‘선 보이기’의 의미가 덧붙여진다.

2. 소비재의 불량품 문제 형상화

1) 선 보는 날 발생한 총각네의 방문 취소

작품은 아침부터 처녀네 집 전화기가 집 안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울려대는 소란스런 분위기로 시작된다. 그 전날 저녁 남자네 쪽에서 여자네 집으로 선을 보러 오기로 했지만,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한다는 전화가 뒤늦게 걸려왔기 때문이다. 전화기 너머에서의 남자는 ‘사죄한다’며 오늘 저녁에 가겠다고 양해를 부탁한다. 화자는 “선보는데서 배정은 남자네쪽보다 여자쪽이 더 센 법이다.”라고 생각한다. 30세 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봐도 남자들은 처녀의 눈치를 보고, 〈가시집〉에 ‘합격’되기 위해 온갖 모지름을 다 쓰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총각네를 떠올리며 실속 없는 사람들과는 마주서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국산 접착제 개발에 헌신한 책임기사와 부임 6개월 지배인의 성급한 욕심 사이

화자가 구두 공장의 지배인으로 새로 발령 난 지가 6개월 전 일이다. 첫날 공장 실태를 파악하면서 화자는 “경량급의 력기 선수가 중량급의 무게를 마주했을 때”와 비슷한 부담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생산 능력과 생산 의욕을 높이자면서, 좋은 신발 제작을 위해 우선 ‘신발의 경량화, 다양화, 다색화, 다종화’를 내세운 바 있다. 책임기사인 현심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신의 연구가 신발의 품질 향상 문제에서 큰 걸음을 내딛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보름 넘게 실험의 실패가 거듭되자, 일부 다른 일꾼들 사이에서는 ‘책임기사가 안될 일을 가지고 너무 고집한다’고 하는가 하면 ‘새 지배인이 책임기사를 너무 감싸준다’는 말이 돌게 된다.

화자는 참모회의에서 '구두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기사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심이 '우리 공장의 기수'임을 강조한다. 그때 7번째 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화자에게 현심이 찾아와, '성공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한다. 화자는 성급하게 미리 '우리의 접착제 성공'을 축하하며, 도에서 처음으로 국산화된 접착제를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현심에게 신심도 주고 공장의 명예도 떨칠 겸 생산을 강행하자고 제안한다.

3) 불량구두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와 신제품 교환

화자가 백화점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설 때, 2층 구두 진열대 앞에서 한 소비자(총각 아버지)가 자재과 처녀에게 목청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구두를 판매하구두 속이 편하오?"라면서 머리칼이 반백이 된 50대 후반의 남자가 구두의 품질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두 제품의 '밑창의 앞끝이 어항속에서 튀어난 봉어입처럼 병긋하니 벌어져있었고 가운데부분이 터져있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화자는 "우리의 자재, 우리의 원료로 만든 구두인데 아직... 그러니 좀 리해..."라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버무리려 하지만 상대방은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의것이라면 백점, 만점짜리를 내놓아야지요."라고 말하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이건... 너무하워다."라고 더 항변한다. 화자는 자재과 처녀에게 공장 명판을 치우라면서 "이게 무슨 망신이나"며, 수치와 모멸 속에 얼이 나간 사람처럼 도망치듯 걸음을 옮긴다.

화자는 나중에 이를 후 자재과 처녀로부터 공장 정문에서 현심이 그 남자 손님에게 구두를 돌려

준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손님은 그제서야 구두가 단단하다면서 현심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악수를 했다는 것이다. 화자는 그때 현심이 불같은 탐구의 열정으로 휴가 기간에도 구두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쉬 없이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된다. 화자는 일정한 연구 성과에 너무 일찍 만족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진취성과 공장애'로 불타는 새 세대의 진정 앞에 머리가 숙여지면서 '오만 가지 생각과 가슴 치는 자책'에 휩싸이게 된다.

4) 아내의 비판과 화자의 부끄러움

날이 어둑해져서 집에 들어온 화자는 총각네쪽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 얼굴이 굳어진 '반백의 사나이'가 인사를 하다가, '그때는 지배인 동지인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낮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한다. 반면에 화자가 낮에 망신을 당했던 사실을 모르는 화자의 아내는 총각이 어제 아파트 앞에까지 왔다가 새로 사서 신은 구두의 밑창이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집으로 그냥 돌아갔었다는 자초지종을 전한다.

아내는 총각네 사정을 모른 채 '우리는 애꿎은 옥만 밤새껏 했다'면서 웃지만, 화자는 얼굴이 더 벌겍게 달아오른다. 나아가 아내는 그 구두를 만든 신발공장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다고 쓰아붙인다. 자기네 자식들이 그런 구두를 신고 선을 보러간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대충 만들었겠냐면서 딸의 일생의 대사를 망쳐놓을 수도 있었다며 비판한 것이다. 화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아내가 이때처럼 경박해 보이기는 처음이다. 오히려 '면구스러운 기색'으로 화자의 눈치를 살피던 총각의 아버지가 그 바람에 질기고 멋진 새 구두를 받았으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뒤늦었지만 양심들은 있다면서 도대체 어느 신발공장이냐고 되묻던 아내는 그제서야 자신이 비아냥됐던 총각네 구두가 남편네 공장에서 나온 구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5) 화자의 자성과 제품 완성도에 대한 깨달음

총각네 아버지가 재차 자신이 너무했던 것은 아니냐며 겸손하게 말하지만, 화자는 미안한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 뿐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드는 구두 한 켤레 한 켤레를 '자기 혈육과 이웃'이 이용한다는 관점으로 일했다면 결과가 다르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화답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총각네와의 선 자리는 잘 마무리된다.

이후 화자는 오늘은 "딸이 선보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 공장 제품을 인민들에게 선보인 날"이었으며, "인민에 대한 나의 관점과 태도를 선보인 날"이었다고 자기비판을 수행한다. 결국 "인민들이 덕을 보지 못하는 계획수행, 인민들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전시회참가는 아무런 의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장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체질화한 사람"과 "말로만 외우는 사람을 갈라본 시험장"이었으며, "우리가 생산하는 소비품들의 합격도장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인민이 찍는다는 귀중한 것을 깨우쳐준" 시간이었음을 깨달으며 작품이 마무리된다.

3. 북한식 리얼리즘의 표정

곽금철의 「선보는 날」은 국산 접착제 개발과 함

께 구두 제품의 품질 개선을 둘러싼 지배인과 책임기사의 태도 차이, 신제품 소비자의 비판과 판매자의 응대 등을 통해 소비재 품질에 대한 인민의 기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처녀 총각이 양가 부모에게 맞선을 보이는 자리가 소재적으로 배치되면서, '구두와 사람의 선'이라는 중첩된 의미가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극적 구성요소로 잘 활용된다. '딸의 선, 제품의 선, 태도의 선' 등을 통해 자력갱생을 하더라도 인민들의 호평을 위해 소비재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결론에서 지배인의 반성적 목소리를 중심으로만 보면 인민을 위해 열사헌신으로 노력하는 책임기사가 북한 사회의 '고상한 인간의 전형'임이 드러난다. 하지만 책임기사의 완벽주의적 태도와 다르게 조급증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배인의 태도가 훨씬 더 리얼리즘적 기물에 다가선 형상화라고 판단된다. 가정과 공장에서 중압감 속에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는 지배인의 모습과 더불어 구두 제품 소비자로서 구체적이고 적절한 항의를 수행하는 총각네 아버지, 총각네 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신상 구두와 함께 제작자를 비판하는 아내의 모습 등은 적재적소에서 북한 인민의 자연스런 표정을 보여주면서 동시대 북한 사회의 일단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소설이라고 판단된다. 🌈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읽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21세기 분학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 모니터 - 우표로 보는 남과 북 48

스포츠로 남북이 다시 만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 대한하키협회 회장



올 9월 열리는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아시아 경기대회)에 남과 북의 선수단이 모두 참가하게 되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로 지난 2021년 개최된 도쿄 올림픽에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세계 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출전 자격을 정지당했다. 작년 말 기한 만료로 징계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인 것이다.

그동안 남북이 발행한 하계 아시안게임 우표들을 살펴보았다. 남측은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대회를 개최하면서 개최국으로서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반면, 북측은 단 한 번 발행에 그쳤는데, 중국이 주최한 첫 아시안게임인 1990년 베이징대회 기념우표이다. 2종을 발행했는데 하나는 대회 상징인 판다 마스코트, 하나는 천리마동상과 체육선수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보통 북한은 우호 국가인 중국의 국제 규모 행사에 대해 친선 차원에서 기념우표를 자주 발행해왔다. 그런데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2010년 북한의 우표 발행 기록을 살펴보니, 상해 세계박람회 우표 2회,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방문 우표 2회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60돌 기념우표까지 중국 관련 우표들이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밀려서 제외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뜨거웠던 남과 북. 하지만 그 이후 단절되었던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만나는 남과 북이 이념을 떠나 스포츠로 다시 하나 되는 모습을 고대해본다.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념우표를 북한이 발행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

North Korea

1



2



1.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 1986.9.20.
2.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소형시트 / 2002.9.28.
3.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6종 연쇄) / 2014.7.31.

3



South Korea

1



2



3



1. 제11차 베이징 아시안경기대회 우표1 / 1990.7.14.
2. 제11차 베이징 아시안경기대회 우표2 / 1990.7.14.
3. 제11차 베이징 아시안경기대회 우표 (확대엽서) / 1990.7.14.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회원단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장 초청 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7월 4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오 시장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가족정책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비전)' ▲여성정책 '서울 우먼업 프로

젝트(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사회 참여 비전)' 등을 소개했다. 허명 회장은 "전국 500만 회원으로 구성된 여협은 오세훈 시장의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의 정착화를 위해 시정에 협력할 것"라며,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에 공감과 협력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도 8월 25일 '제6기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여성분야를 대표해 허명 회장을 위촉했다. 2024년 8월까지 1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서울시 여성, 가족정책을 비롯한 시정업무에 자문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2

2 대한한의사협회, 광복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익)가 광복 78주년을 기념하여 8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권 회복 과정과 한의사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독립협회 이후 대한민국 100년 궤적'과 '한의사의한국독립운동'의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한의사들을 조명하며 그간 우리 사회가 미처 알지 못한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공적들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과거 재판기록을 통해 한의사임이 확인된 독립운동가가 33명이 되며, 한의약업에 종사한 인물 44명이 3·1운동에 참여했음을 발표했다. 발표·토론자들은 앞으로 한의사 독립운동사(史)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한의사협회, 국회의원 홍익표·이철규·윤주경·민형배, 대한학술원이 공동주최했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후원했다.

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77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개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박준영, 우희중, 최완규)에서 지난 8월 29일 오후 7시 "한반도 안보 위기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77회 평화나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후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평화나눔센터 소장을 맡고 있

3



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 진행됐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행사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4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제17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이사장 민화련, 상임대표 이장희)에서 제17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3년 9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6주간 남북경협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경협기업 실무자, 정책 및 연구자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윤갑구 에이스기술재단 대표이사 등 통일문제와 남북교류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현재 수강생 50명 선착순 모집 중이며, 개강식은 9월 20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02-766-4770)



경기도 연천 평화기행 첫 번째 이야기

글·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묘비에 총알자국이 선명한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왕릉은 DMZ로 부터 불과 100M 떨어진 포랑포구 근처에 있다.

가을걷이가 한창이던 2014년 10월 10일 오후 4시, 인구가 200명도 안 되는 평온한 연천군 중면 일대에 난데없는 총탄 소리가 들려왔다. 대북 전단(빠라)을 매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14.5mm 고사총을 발사한 것이다. 고사총 탄두는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에 떨어졌다. 군 당국은 최고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K6 중기관총 40여 발을 북한 GP를 향해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이 우리 GP를 향해 응사했고 국군은 K2 소총 9발을 북한 GP에 재 응사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두 개의 반북단체가 파주와 연천군 일대에서 수백만 장의 빠라를 살포했으며,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가자, 고사총을 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남북 간 피해는 없었지만, 연천군 주민 60여 명은 급히 대피소

로 피해야만 했다. 북한은 남쪽에서 빠라를 살포할 경우, 원점타격, 조준사격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급기야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고 이후 남북관계는 더더욱 악화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마음 졸이고, 농사일을 하다가도 대피소로 피신해야 했기에, 트랙터 같은 농기구를 몰고 와 빠라 살포를 막고 있다. 이들은 "당신들은 뿌리고 가면 그만이지만 피해는 우리가 본다"라고 말한다.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접



일제강점기 때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던 고랑포는 전쟁 후 완전히 파괴되어 포구는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했다.

경지역 주민들의 77%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0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부 탈북자 단체와 보수단체는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하면서 비난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빠라가 날려 보내지고 있다.

쓸쓸한 경순왕릉과 고랑포

올해 인구가 1,40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는 31개 시, 군이 있으며 그중 군은 3개에 불과하다. 연천군 인구는 약 4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사람이 살고 있다. 면적은 1천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보다 더 크지만, 대부분 접경지역이 그렇듯 상당 부분이 군사 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 연천군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상당 부분이 38선 이북에 위치한 북한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장단군의 일부를 편입했다. 주도로는 3번 국도와 37번 국도가 있으며, 경원선도 지나간다. 또한 임진강과 한탄강이 북한에서 발원해 남한으로 흐르며, 남북으로 분단된 임진강은 민족의 애환을 안고 남북을 넘나들며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면서 연천 도감포에서 한탄강과 만나고, 파주 교하에서 한강

과 합류해 서해로 흘러간다. 8·15해방 전까지는 서해에서 고랑포까지 많은 상선이 왕래했으며 황복, 장어와 함께 참게는 대표적인 어종으로 임진강 참게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갔다고 한다.

임진강 최상류 포구인 고랑포는 곡물 400석을 실은 배가 출발했으며, 바다의 생선, 젓갈, 소금과 육지의 목재, 특산물 등이 거래됐다. 매일 30~40척의 배가 고랑포를 드나들 정도로 번창했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화신백화점 분점과 금융기관, 우시장, 약방 등이 있는 커다란 상업도시가 고랑포 마을이었다. 서울-개성을 오고 가는 버스가 강을 건널 때는 고랑포에서 배에 실려 강을 건넜다. 고랑포 건너편



2002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기증 받은 유물 중 하나인 광개토대왕비 모형. 6개월 동안 코엑스에서 전시 후, 여러 도시에도 순회 전시했다. 이후 2015년 연천군에 기증하여 지금은 호로고루성 근처에 전시되어있다.

장좌리 드넓은 백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씨름대회, 소풍 등 축제와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 고랑포 마을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집 한 채, 배 한 척 없는 허허벌판으로 변해버렸고, 민통선 지역으로 묶여 한동안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여 년 전 인근 경순왕릉과 함께 민통선 지역에서 해제되어 지금은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쓸쓸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강의 전경은 백사장과 포구의 어울림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한 번쯤은 가 볼만한 곳이다. 최근 개관한 고랑포역사공원에 가면 고랑포의 옛 영화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비룡전망대, 경순왕릉, 고구려의 호로그루성, 고랑포(역사공원)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하루에 둘러 보기에 제격이다. 9~10월의 호로그루성 해바라기축제는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 연천군은 해바라기밭과 주차장을 넓히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호로그루성은 5세기 고구려 성이다. 임진강 남쪽만 감시하는 전초기지가 아니라 일대의 성을 총지휘하는 곳이다. 일대에 고구려 성은 덕진산성, 당포성, 은대리성이 있다. 임진강은 <삼국사기>에 ‘호로하’로 기록되어 있으며, ‘호로하’는 임진강의 옛 이름 중 하나로, 호로그루는 호로하에 있는 보루라는 뜻이다. 성벽 정상부 주변에는 고구려 토기조각을 비롯해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각종 기와나 그릇 조각들이 산재하여 있으며 고구려 유물이 가장 많다.

수해 방지 위한 남북협력 재개되어야

935년 왕건에게 항복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김부대왕)은 개성 인근에서 4대 왕에 거쳐 장수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부대왕은 태자보다 높은 지위인 정승이라는 벼슬과 경주를 식읍으로 받았다. 김부



임진강변 고구려 성 호로그루성. 주변에 당포성과 은대리성, 파주에 덕진산성이 있다.

대왕이 승하하자 경순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경순왕의 시신을 경주로 운구하려 했으나, 경종은 “왕의 운구는 도성 밖 100리를 넘을 수 없다”는 칙령을 내려 장례행렬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고랑포에 안장했다. 기록에 의하면 장례행렬은 ‘30리가 하얏다’고 표현되었을 정도로 대단했다. 당시 묘비명은 신라 김부대왕 지묘로 되어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방치되어 묘비만 나뒹굴다가 조선 영조 때 현재의 신라 경순왕 지묘로 복원됐다. 한국전쟁 후 민통선지역으로 경순왕릉을 비롯한 주변은 지뢰밭으로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또 실묘됐다가 1973년 여길도 대위에 의해 우연히 신라경순왕지묘라는 묘비석과 혼유석, 장면 등이 발견된다. 이후 사당과 비각을 짓고 능 주변의 지뢰를 제거해 현재는 탐방객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초보자가 봐도 좌청룡 우백호에 배산임수인 능의 주인은 경주를 벗어난 비운의 왕으로 비석에는 8발의 총탄 자국이 있어 더욱 애처로워 보인다.

경순왕릉을 지나 1킬로미터 정도 앞으로 가면 김문소가 나오는데 직진하면 1·21무장침투로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꺾어져 가면 비룡전망대가 나온다. 비룡전망대에 도달하면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자연스럽게 철책선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 대략 300미터 정

도 걸어갈 수 있어 철책선 걷기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전망대에 도달하면 인근 상승 OP와 마찬가지로 장교가 나와 설명한다. 철책 넘어 오른쪽이 사미천(뱀의 꼬리)으로 장마철에는 북한의 생활물품이 떠내려 오고 심지어는 배도 떠내려 온다. 한국전쟁 당시 감악산 자락 중성산을 사수하기 위해 설마리에서 많은 영국군이 전사했으며, 과거에는 여기에서 발굴된 영국군의 철모, 탄피, 소총, 대검, 솔, 병 등을 발굴 전시했으나, 지금은 감시 장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11개의 GP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중 2개가 비룡전망대 전방 좌우로 있다. 비룡전망대는 과거 승전전망대(OP)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므로 승전전망대로 검색해 보면 자료가 더 많이 나온다, ‘DMZ 평화의길’ 연천코스는 비룡전망대-무장침투로-호로그루성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있으며 www.durunubi.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회에 2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백학면에 위치한 상승전망대는 전쟁 전 비옥했던 연천 평야였지만 현재는 DMZ 안 잡초가 우거져 있는 모습만 볼 수 있다. 이곳에서 1974년 땅굴이 발견됐으며, 최초로 발견되어 제1땅굴로 비무장지대에 위치해 상승전망대에는 실제 크기의 모형만 있다.

2009년 장마철이 지난 9월 새벽, 장마철이 아남에

도 갑자기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였다. 강가에서 야영하던 우리 야영객들이 급류에 휩쓸려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에 있는 황강댐에 문제가 있어 수문을 갑자기 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임진강에 황강댐을 비롯해, 4월 5일댐, 1~4호댐 등이 있다. 방류를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했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2009년 10월 개성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향후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황강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을 앞당겨 저수량 7,100만 톤의 군남댐을 2010년 6월에 준공했다. 황강댐은 군남댐의 5배 저수량이다. 군남댐과 황강댐의 거리는 56킬로미터에 불과하며, 황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8시간이면 군남댐까지 도달한다. 군남댐은 봄철에만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로 활용할 뿐이고, 그 외에는 항상 비어있다. 그동안 북한은 황강댐 방류를 3차례 군 통신선을 통해 통보했는데,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더 이상 황강댐이나 북한강의 임남댐 방류를 남한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올해 7월에도 북한은 예고 없이 황강댐을 방류했다.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비정치적, 비군사적 부분은 인도적 차원에서 사전에 댐 방류를 통보해 주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기본이 될 것이다. 모든 댐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강의 군남댐과 북한강의 평화의 댐은 기형적으로 비어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군남댐과 평화의 댐 수위가 올라갈수록 평화의 배터리도 충전될 것이다. 🌊

이영동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통일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DMZ 접경지역을 답사하며 평화 해설사로 활약해온 평화통일 운동가이다.



이제훈 | 서해문집 | 2023. 8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질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끝없이 오가며 풀릴 듯, 도무지 풀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비대칭 탈냉전'이라는 렌즈로 1990-2020년의 남북관계사를 돌아본다. 1990년은 '탈냉전'이라는 이름의 대전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냉전질서와 그 위에 놓인 한반도 분단체제에 일대 격변이 벌어진 때다. 이 해를 전후로 동·서독이 통일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적 체제전환이 일어났다. 반면 한반도에서의 탈냉전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소련-중국(사회주의 진영)과 국교를 맺은 한국 대 미국-일본(자유주의 진영)과 수교에 실패하며 홀로 고립된 북한'이라는 비대칭적 탈냉전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기울어진 탈냉전'을 바느질로 1990-2020년 남북 사이의 결정적 사건 42개를 한데 엮는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30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안에 숨은 맥락(남북의 불신과 북미 간 적대, 북핵문제의 근원과 해법,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본심)을 포착해 한반도 분단사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을 선사한다. 저자의 시각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 이런 균형에 힘입어 이 책은 신실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어도 남북통일에 동의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이재에 밝은 시장주의자일수록 남북경협의 적극적 지지자가 될 수 있음을 설파한다. 그리하여 이 책은 남북관계 30년을 먹기 좋게 정리한 역사교양서인 동시에, 좌우 이념과 무관하게 평화로운 일상을 바라는 한반도 주민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잡이다.

직항은 없다 - 인천에서 평양으로 떠난 네덜란드인 부자의 북한 여행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저자에게는 북한 관광이 가능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여권 외에는 모두 북한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공인된 특정 여행사를 통해야 하고, 여행지에 서도 관광이 자유롭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폐쇄된 나라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꾸준히 북한을 향하고 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유튜브 구독자에게 북한 여행을 이야기한 저자는 며칠 뒤 비행기와 기차를 이용한 30시간의 이동 끝에 평양에도 착한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당한 다리의 모습,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극명한 풍경 차이를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모습, 긴장감이 감돌았던 세관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이후의 일이다. 저자가 직접 들여다 본 북한은 공공해가 없는 철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아름답고 웅장한 평양역, 교통보안원이 몇 대 되지 않는 차들을 통제하고 간판 없는 가게들이 즐비한 신기한 세상이었다.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의 풍경은 분명 신선하게 다가왔다.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보며, 현지 아이들과도 만나며 북한을 관광했다. 저자는 기념품으로 모란봉 악단의 노래 앨범을 사왔고, 지금도 많은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있소, 언젠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힌다. "미래에는 남북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히며 책을 끝맺는다.



바트 반 그른트 | 크루 | 2023. 8

북일 교섭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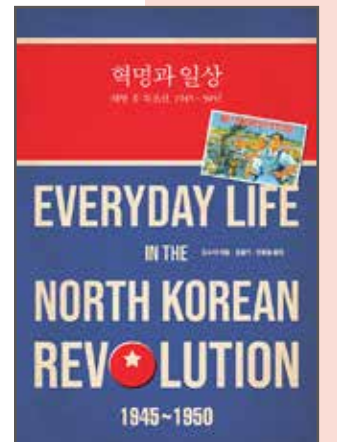
일본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전쟁 국가의 역사를 끝냈다. 이후 일본은 연합군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과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2년 타이완, 1954년 미얀마, 1956년 소련, 1965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2년 중국, 1973년 북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공식적인 국교 수립 노력은 199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 이어진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는 2000년 9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때와 맞물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01년 중에 늦어도 2002년 월드컵 개최까지는 북일 교섭을 실현하자"라는 목표 아래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가 설립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이 협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가 협회의 활동을 비롯한 북일 국교 수립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되짚어 본 백서라 할 수 있다.

혁명과 일상 - 해방 후 북조선, 1945-50년

책은 외부의 힘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진 해방, 이후 이어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사회주의 항일 무장투쟁과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 항일 민족주의 운동의 전통 등이 빛어낸 '해방 공간'을 이북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흔히 이 시기에 이루어진 북조선의 국가 형성은 소련을 모방한 중앙집권적 과정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다 보니 해방 직후 이북 지역에서 벌어졌던 모든 정책이나 정치적 과정들이 모두 소련이 뒤에서 조정했다거나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시각이 강했다. 당연히 이런 시각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가 부각된다. 하지만 이 책이 적절히 지적하듯, 지방 수준으로까지 소련의 정책이 일관되게 전달되지는 못했으며, 적어도 1948년 중앙정부 수립과 1950년 전쟁으로 치달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지역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시기였다. 이 책은 바로 이 같은 시공간에 주목하며 미국국가기록관리청에 보관돼 있던 북조선 노획 문서들(편지, 일기, 인사 서류철, 다양한 조직의 회의록, 교육 자료, 신분, 잡지, 사진 등의 방대한 자료)을 활용함과 동시에, 특히 그 가운데서도 소련의 권력이 힘을 미치지 못했던 인제군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한 사회혁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오늘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들의 구술사 자료, 저자의 구술 인터뷰 등을 포함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보완함으로써, 해방 직후 한반도 이북의 상황을 모자이크처럼 재현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 | 서해문집 | 2023. 8



김수지 | 후마니타스 | 2023. 8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3호의 정답은 '독립유공자 유족회'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권두 인터뷰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바라본 통일문제에 대한 고견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 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역사 이념논쟁을 보고 있으니, 과연 통일이 이뤄질 수 있는가부터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 이념 갈등이 격화되어 더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언제가 찾아올 남북 평화의 시기'를 위해 통일 의지를 모아가자는 김삼열 회장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 오유정 대전 유성구



이슈 앤 포커스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펼쳐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만큼은 중국을 실리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처럼 중국을 포함한 4대국 외교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길 바랍니다. - 위승남 부산 진구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북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본다는 것, 특히 최근의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거리 등정과 야영을 마다하지 않은 작가의 열정과 수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한반도 산하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북녘의 산하와 자연을 바라보며 민족의 상징 백두대간을 남과 북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 정경석 대전 중구



민족화해 네트워크①

초등학생 자녀를 2명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통일이 하루빨리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잘 알려고 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민화협의 통일문화축제는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명소로 거듭난 DMZ 길도 걷고 캠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참된 통일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도 내년에는 통일문화축제에 참여해서 꿈이 아닌 현실로 통일이 다가오기를 염원하고 싶습니다. - 박태규 인천 연수구



민족화해 네트워크②

롯데장학재단과 민화협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수여식이 거행된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기관이 올해 4회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심에 감동이었으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자긍심과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써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장차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 최병갑 전남 화순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족화해〉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남북 이슈,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제21회 민족화해상 추천 바랍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경향신문사는 『제21회 민족화해상』 후보자를 추천 받습니다. 민족화해상은 민족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통일준비운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추천 바랍니다.

추천대상

정치, 경제, 학술, 문화, 예술, 사회운동 등 각 분야에서 민족화해와 협력,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시상부문

민간교류, 국민통합, 통일준비

시상내역

3개 부문 각 상패와 상금 300만원

제출서류

추천서(소정양식), 증빙자료(사진자료·보도자료·활동근거 등)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민족화해상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민화협 홈페이지(www.kcrc.or.kr) ▶ 소식 ▶ 알림마당
▶ 제21회 민족화해상 후보자 추천 안내

접수마감

10월 5일(목) 오후 6시까지

선정절차

각계 인사로 구성된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

시상식

12월 예정

